

"5.24 평화와 군축을 위한 세계여성의 날" 기념 심포지엄
한반도 종전과 평화를 위한 여성의 역할
Korea Peace Now!!

사회 백미순 상임대표(한국여성단체연합)

<p>격려사</p>	<p>한영수 회장 (한국YWCA 연합회) 김성은 이사장 (평화를만드는여성회)</p>
<p>주제 발표</p>	<p align="center">한반도 여성들이 평화운동의 역사와 향후 방향 김정수 상임대표 (평화를만드는여성회)</p>
<p>발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여성주의 외교 정책의 중요성과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영숙 소장(한국여성단체연합 국제연대센터) 2. 시민사회와 의회의 새로운 모델 : 한반도 전쟁 종식 요구 결의안과 의회 로비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현정 (WCDMZ Consultant/ US Organizer) 3. 한반도 평화와 UN, 여성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유경 (WILPF Consultant) 4. 여성평화운동과 분쟁지역의 여성참여와 한반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영미(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 집행위원장) 5. 대북제제와 인도적 지원: 한반도 평화체제제를 향한 여성의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수산나 총괄부장(한국YWCA연합회 중점운동)

종합토론

목 차

격려사	1
<p>한영수 회장 (한국YWCA 연합회) 김성은 이사장 (평화를만드는여성회)</p>	
주제발표	
한반도 여성들이 평화운동의 역사와 향후 방향 - 김정수 상임대표 (평화를만드는여성회)	4
발표	
발표 1. 여성주의 외교 정책의 중요성과 방향 ○ 조영숙 소장(한국여성단체연합 국제연대센터)	17
발표 2. 시민사회와 의회의 새로운 모델 : 한반도 전쟁 종식 요구 결의안과 의회 로비 활동 ○ 이현정 (WCDMZ Consultant/ US Organizer)	23
발표 3. 한반도 평화와 UN, 여성참여 ○ 고유경 (WILPF Consultant)	28
발표 4. 여성평화운동과 분쟁지역의 여성참여와 한반도 ○ 조영미(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 집행위원장)	32
발표 5. 대북제재와 인도적 지원: 한반도 평화체제체를 향한 여성의 역할 ○ 최수산나 총괄부장(한국YWCA연합회 중점운동)	47
부록 1.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번영을 위한 여성선언(한글, 영문) 2.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와 국제사회에 보내는 한국시민단체 호소문 3. 성명서: 대북식량지원에 대한 여성들의 요구(한글, 영문) 4. 한반도 전쟁종식과 평화를 위한 여성행동 Korea Peace Now! 발족기념 공동성명 5. #4 Korea Peace Now Fact Sheet	57
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 소개 참가단체 소개 (전국여성연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여성회, 한국YWCA연합회)	82

격려사

한영수(한국YWCA연합회 회장)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전쟁 종식을 위한 여성 행동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께 감사와 축하를 드립니다.

지금 한반도는 새로운 변화의 시대 앞에 서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평화와 통일을 향한 운동은 시대적이고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부상과 침체를 겪어왔습니다. 어려운 과정이었지만 중단되지 않고 평화의 길이 이어진 것은 평화를 염원하는 마음과 지혜를 모았던 여성의 노력이 기반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한반도의 여성들은 분단과 갈등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힘을 내부로부터 키워내고, 안과 밖의 연대를 만들어내는 역사적 경험을 해왔고, 지금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성평화운동은 다른 운동과 구별됩니다. 평화를 통한 평화 운동, 지혜와 창의성을 가진 운동, 대화와 협력이 중시되는 운동, 이 모든 특성은 오랜 시대를 거쳐 여성들에게 습득되어진 감수성과 통찰을 반영합니다. 이러한 여성평화운동이 연대를 통해 더 큰 힘을 만드는 오늘 이 자리는 평화의 길, 변화의 문을 여는 중요한 시작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한국의 4개 단체의 연대로 시작하나, 우리를 이어주고 지지해주는 보이지 않은 수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여성의 힘을 보이는 곳으로 끌어내는 것, 그리고 이 평화의 끈을 엮어내는 것이야말로 지금 이 시대에 요구되는 평화 운동일 것입니다.

1980년대부터 평화통일운동을 시작한 한국YWCA는 100주년의 비전으로 한반도 평화체제의 준비를 선포하고 53개 지역의 회원 YWCA와 10만 명의 회원이 함께 '한라에서 백두까지'의 평화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이 자리가 YWCA를 비롯한 모두에게 평화의 귀한 큰 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운동을 위해 애써주신 단체장님들, 실무자님들, 모든 회원 분들, 그리고 국제 사회에서 열정과 자매애로 함께 해주시는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격 려 사

김성은(평화를만드는여성회 이사장)

오늘 5.24 평화와 군축을 위한 세계여성의 날을 맞이하여 여성운동, 평화운동, 통일운동단체들이 ‘한반도 전쟁 종식을 위한 여성평화행동 Korea Peace Now’ 캠페인을 시작하고, 또 기념 심포지움을 열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성평화운동은 무엇보다 한국전쟁의 종식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오랜 주장이었습니다. 전쟁의 고통과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바로 남과 북의 여성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18년 남북정상회담 판문점에서 “한반도에서 더 이상의 전쟁이 없다”는 선언은 모두에게는 축복이었고, 이것이야말로 8천만 우리 겨레가 가장 원하는 평화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한반도에 평화의 약속은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북미 핵협상은 서로에 대한 요구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결렬되었고, 그 사이에서 우리 정부의 역할은 당사자로서의 역할이나 중재자로서의 역할이나 아직 확실한 비핵화 로드맵과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 채 중단되어 있습니다. 그 사이에 북한의 식량문제는 지난 2008년 이래 가장 열악하여 인구의 절반 미만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별히 아동의 3분의 1이 최소한의 식량을 배급받고 있다는 소식을 얼마 전에 들었습니다. 다행히 한국정부에서 대북식량지원 의사를 밝혔고,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도 허락을 했고, 또 북한에서도 대북교류협력 단체들과 심양에서 실무모임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들의 평화행동, 전쟁종식 요구 활동은 벌써 오래된 일이며, 특별히 DMZ 평화걷기, 평창평화걷기를 통해서 여성들은 전쟁종식과 평화협정을 요구해 왔습니다. 이제 이러한 주장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또한 여성들의 참여를 통해 성과를 내기 바랍니다. 평화를만드는여성회도 여성평화운동 전문단체로서, 남북여성교류, 동북아여성평화회의, 여성평화걷기를 주도해온 단체로서 열심히 참여할 것입니다.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꼭 여성들의 힘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이룩할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제 발표



한반도 여성들이 평화운동의 역사와
향후 방향

김정수(평화를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

한국여성들의 평화운동 역사와 향후 방향

김정수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

1. 여성평화·통일운동의 출발과 주요 담론에 대하여

2018년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분단 이후 최초로 이뤄진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새로운 평화’의 문이 열렸다. 성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설교를 시작하며 공(公)생애를 시작한다. 신약학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미, 그러나 아직 아니 already, not yet”이라고 해석하는데, 이를 지난해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의 시작된 “평화, 새로운 시작”은 ‘이미 시작된 평화, 그러나 완성되지 않은’ 평화의 문을 열었다고 본다.

대구가톨릭대학의 이정옥 교수는 바로 이 중간의 시간, 2018년에 시작된 평화의 시간이 g한반도의 주민들, 특히 여성들에게 도래한 카이로스적 시간(역사의 특별한 때)이라고 부르면서, 특별히 2010년이 베이징행동강령 25주년, 여성평화안보에 관한 유엔안보리 결의 1325호 채택 20주년으로 기념하는 이때에 한국의 여성평화운동이 다가오는 특별한 시간, 카이로스적 시간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이것은 바로 한국여성평화운동에게 주어진 역사의 책무성에 대답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이는 이미 도래한 한반도의 평화,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중간의 시기와 연결되면서, 한국에서 여성평화운동을 하는 모든 이들에게 던져주는 무거운 과제이기도 하다.

지난 30여년 간의 한국여성평화운동, 통일운동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 선배들의 헌신적 노력의 성과로 여성들이 한국의 근대사를 평화와 정의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역할을 담당하였던 것을 발견할 수 있다.

한국여성평화운동은 1970년대 한국교회여성연합회의 ‘원폭피해자 지원운동’으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기록되고 있으며(정현백), 1988년 2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기독교교회 선언” 이후 진행된 교회여성들의 통일희년운동(1988~1995)과 함께 1991~1993년까지 동경-서울-평양-동경에서 개최된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남북여성교류), 그리고 1990년대 초의 걸프전쟁 반대운동과 방위비 삭감운동 등이 초창기 여성들의 평화·통일운동으로 이해될 수 있다.

여성평화·통일운동의 담론적 측면에서 본다면, 한명숙은 『한국여성단체연합 10년사』에서 “여성연합은 1987년 2월 창립 초기부터 통일문제를 여성운동의 과제로 수용하

여 여성의 관점에서 독자적으로 통일운동을 전개해 왔으며, 전 세계에서 전개되는 평화운동과 한국의 통일운동은 어떤 관계에 있으며 통일운동의 당면과제는 무엇인가라는 원칙적 물음과 씨름해왔고, 평화의 소극적 개념을 넘어 한 사회의 긴장과 갈등을 낳는 사회제도와 문화 전반의 개혁이 이루어질 때 비소로 진정한 의미의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할 수 있다.”고 한다.

한명숙의 설명은 한국여성평화운동이 지난 30여 년 동안 고민해 온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잘 드러낸다 하겠다. 즉 ① 여성운동과 평화/통일운동의 관련성, ② 평화운동과 통일운동의 관련성, ③ 소극적 평화운동과 적극적 평화운동이 그것이다. 한편 정현백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창립 10주년으로 열린 좌담회(2008년 4월)에서 “평화여성회가 10년이 되면서 느끼는 소회는 먼지 나는 먼 길을 달려온 갈증 같은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실천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과제를 걸머지고 여전히 끝이 안 보이는 신작로에 서 있다는 느낌이랄까요?”라고 토로한 적이 있다. 소수의 여성들과 단체들이 지탱해 온 여성평화운동의 다양성과 복잡성, 어려움을 솔직하게 털어놓은 것이다.

발제자는 한국여성 평화운동, 통일운동이 전개된 지난 30년의 역사를 상세하게 소개하기 보다는 향후 과제를 중심으로 하여 논의를 전개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그동안 전개된 운동의 범주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아프간전쟁·파병반대운동 등 제외)

2. 여성평화·통일운동의 성과와 과제

(1) 남북여성교류 운동 & 북한여성과 어린이 지원운동

① 1991~3년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

- 성과** (1) 분단 이후 최초로 민간 차원의 교류의 물꼬를 여는 데 기여함
 (2) 평양토론회는 민간인으로서 처음으로 남한의 여성들이 판문점을 거쳐 북한을 방문, 평양에서 성사시킨 역사적 사건인 동시에 북한에 거주하는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증언을 직접적으로 듣게 된 의미 있는 토론회가 됨, 이후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남북여성들 공동의 해결과제가 됨
 (3) 일본여성들의 협력으로 토론회가 성사됨 - 향후 국제여성연대 협력 모델이 됨

- 한계** (1) 1차 북핵위기(1994년), 김일성 주석 사망 등 남북관계과 북미관계 등 정치적 환경 변화의 영향을 받음. 독자적이고 자율적인 교류협력이 이뤄지지 못함
 (2) 여성들의 고유의 관심사, 젠더 관점의 공동의제 발굴하는 데 한계를 드러냄

②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여성교류

- 남-북-해외 여성들이 각각의 6.15 여성본부를 통해 독자적인 교류행사를 진행함. 2002년 금강산에서 열린 '6.15 공동선언 실천과 평화를 위한 남북여성통일대회'(700명) 이후 금강산, 평양, 개성 등에서 대규모 여성통일행사 개최함 - 여성교류의 정례화를 이룸
- 2008년 이후 정례화된 여성교류가 어려워지고, 일본군 '위안부' 주제로 해외(중국)에서 모이고, 6.15 여성본부 차원의 대규모 교류행사는 2015년 12월 23일 성사된 것이 마지막임
- 2018년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 이후 금강산에서 민화협, 6.15 차원이 연대 모임이 성사되어 여성계 대표단도 참석, 북측 여성대표단과 상봉모임 진행함

성과 (1) 남과 북의 여성들이 통일과정에서 화해와 협력의 주체로 나서 6.15공동선언의 실천, 전쟁방지를 위한 공동의 과제를 가지고 연대와 협력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임

(2) 정례화 된 만남을 통해 서로 다른 체제에서 오랜 기간 떨어져 살아온 남과 북의 여성들이 서로에 대해 이해하고 공감을 형성하면서 남북의 통합을 준비하고 통일된 미래를 준비하는 상호학습의 경험을 쌓게 됨

한계 (1) 2008년 이명박 정부 들어서 남북관계가 악화되면서 정례적으로 이뤄지던 여성상봉모임과 독자적인 여성교류는 축소되고 종군위안부 이슈와 같은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만남이 드물게 이뤄짐 - 남북관계의 정치적 부침에 따라 여성교류가 축소되는 등 한계를 드러냄

(2) 여성들의 고유의 관심사, 젠더 관점의 공동의제 발굴하는 데 한계 노출

'6.15 공동선언 실천과 평화를 위한 남북여성통일대회'(2002, 금강산) 공동결의문

- ① 조국통일의 새로운 희망과 믿음을 가지고 6.15 공동선언 실천을 통한 통일운동에 적극 나선다.
- ② 이 땅에서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와 안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
- ③ 이 땅에 평화와 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여성들 사이의 연대와 단합을 적극 도모해 간다.
- ④ 남녀가 평등한 통일사회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인다.

③ 북한 여성과 어린이 지원운동

성과 : 여성들이 참여하여 여성과 어린이에게 식량과 영양식(분유, 밀가루, 콩우유, 영양빵) 지원운동 전개함. 북한지원을 위한 모금활동은 특별히 수해나 예기치 않은 사고로 북한여성과 어린이들이 위기 상황에 처해있을 때 전개되었고, 남북관계가 미사일 발사 등으로 위기에 처해있거나(2006.7), 장기적인 경색 국면에 진입하는 시기(2011)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이 인도적 차원의 모

금활동을 전개하여 지원함으로써 남북여성 사이에 생명과 평화의 연대를 이
어움

- 한계 : (1) 북한여성들이 필요에 기초한 지속적 지원 모델을 발굴하지 못함
(2) 대북인도적 지원 모금, 활동/대북인도적 지원단체에 여성들이 적극적
으로 참여했으나 여성운동의 성과와 여성통일운동 리더십 형성으로 수
렴되는 데 한계가 있었음

(2) 평화통일의제 정책제안 활동

① 2000년 5월 29일 여성연합. 평화여성회 공동주최,

<남북정상회담: 여성, 무엇을 할 것인가> 여성평화통일포럼

□ 성인지적 통일운동의 기본 원칙 천명

- 분단으로 인해 고통 받는 이들을 우선으로 하는 **인도주의적 원칙**
- 인간안보적 접근과 남북 간의 적대감의 극복과 차이를 인정한 공존의 **평화주의 원칙**
- 여성의 주체적 참여를 위한 법.제도의 마련과 같은 성인지적 **양성평등의 원칙**

□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여성들의 요구

- 남북정상회담과 후속과정 등 통일과정에 시민사회 특별히 여성 대표성 30%까지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 여성관련 의제를 남북정상회담과 후속 협상에서 포함
- 인도주의적 원칙에 의거하여 북한의 여성(모성)과 어린이의 건강상태 개선에 역
점
- 남북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열기 위한 평화교육의 제도화와 공교육에 갈등해결과
평화교육 반영

② 2007년 통일·평화 부문 대선의제 제안 (여성단체연합)

1. 통일, 평화분야에서 성주류화 관점을 강화하고 여성의 대표성을 확대
2. 남북 여성교류 인프라 구축과 지원을 강화
3. 정부 예산의 1%를 대북 개발협력 사업에 사용하고, 대북사업에 여성참여를
확대
4. 통일 및 평화교육 확대와 통일·평화·갈등해결 교육에 성평등적 관점을 채택
5. 정부는 '위협과 공포의 균형'이 아닌 공동안보(common security)와 평화,
환경보호, 인권존중, 민주주의 신장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서 인간 안
보를 추구

③ 2012년 통일·국방 분야 대선의제 제안(평화를만드는여성회)

1. 유엔안보리 1325결의에 따른 국가행동계획 수립
2. 남북여성교류 인프라 구축
3. 북한여성과 영유아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향후 개발협력에 성평등 관점 반영
4. 평화협성과정에서 여성참여
5. SOFA 개정과 여성인권보호
6. 방위비 감축과 복지예산 확대
7. 군사문화를 평화문화로 전환

성과 (1) 성인지적 관점의 통일(평화), 국방(안보) 분야의 의제를 발굴하고 제안함
 (2) 통일/국방 분야의 여성 참여에 대한 지속적 요구를 통해 의제의 중요성 확산함
 (3) 인간안보/평화주의 관점에서 남북의 공동안보와 지속가능한 평화 비전 제안함

한계 (1) 유엔안보리결의 1325호 국가행동계획 수립과 인식확산이라는 성과를 제외하고 여성들의 정책 제안 요구가 구체적으로 수렴되어 정책화, 제도화 되지 못함
 (2) 여성참여, 여성대표성 확대, 성인지예산(남북교류협력기금) 등 제안에 대한 구체적 성과를 거두지 못함

④ 유엔안보리결의 1325 국가행동계획 수립 촉구 및 후속 활동

- 한국에서 1325 국가행동계획 수립 촉구활동은 2010년 경부터 시작됨
- 2010년 평화여성회와 여성연합 ‘한국정부의 UNSCR 1325 이행에 관한 질의서’를 통해 국가행동계획 수립 촉구 활동 진행
- 평화여성회는 2012년 대선 의제로 제안함
- 2012년 6월 국회에서 1325 국가행동계획 수립촉구 결의안 통과
- 여성가족부, 외교부, 국방부와 여성시민사회 거버넌스 구성: 시민사회 모니터링 요구
- 2013년 ‘1325 네트워크’ 구성(약 45개 단체 참여), 민관협의체 참여, 역량강화워크숍, 공개토론회, 정부부처 만남 등 활동
- 2014년 5월 13일 한국정부 1325 국가행동계획 발표 (유엔회원국 중 45번째)
 - ※ 여성단체들이 민관협의체 통해 요구한 내용 누락
 - ① 국가행동계획 이행을 위한 민간협의체 구성
 - ② 주한미군 주둔과 미군범죄의 피해자 지원
 - ※ 여성단체들 성명서
 - ① 국가행동계획 이행을 위한 법률적, 제도적 정비
 - ② 국가행동계획 이행 과정에 정부와 시민사회의 새로운 거버넌스 구축
 - ③ 국가행동계획을 이행할 수 있는 객관적 환경조성 등 요구

- 2017년 11월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 통과 (남윤인순 의원 발의)
 - 여성·평화와 안보에 관한 유엔 안보리 결의 1325에 따른 국가행동계획 수립 및 이행평가·심의 의무화
- 2018년 5월 한국정부 1325 2기 국가행동계획 (2018~2020) 발표
 - ※ 주관: 여성가족부
 - 참여부처/기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통일부, 행안부, 교육부, 경찰청, 코이카

성과 (1) 여성단체들의 조직된 활동으로 국가행동계획 수립에 기여함
 (2) 양성평등기본법에 의거하여 연차별 이행보고서 작성 - 국회보고하게 됨
 (3) 1325 국가행동계획을 통해 통일, 외교, 국방 분야에 대한 성주류화 전략 수립과 이행이 가능해짐 (플랫폼 기능)

예) 외교부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이니셔티브” 사업
 (분쟁 하 성폭력 피해자 지원 - 개발협력 분야와 연관하여 진행)
 국방부 - 양성평등정책담당 부서 신설 등

한계 (1) 여성평화안보 아젠다와 각 부처/기관의 성주류화 사업의 차별이 드러나지 않음
 (2) 통합적 접근, 정부 차원의 컨트롤 타워 부재, 여가부의 역량 제한으로 이행-모니터링-평가 등의 환류시스템 구축의 한계가 있음
 (3) 1325 국가행동계획 이행을 위한 예산이 배정되지 않음
 (4) 이행평가와 모니터링 방법론이 수립되지 않음
 - 민관거버넌스 구축이 이뤄지지 않음
 - 시민사회는 민간자문단으로 연 2회 점검회의 참석

3) 한반도 평화체제 형성을 위한 국제연대활동

① 동북아여성평화회의 (2008~2012)

※ 2002년 10월 6일 북한 1차 핵실험 후 평화여성회 & 여성연합 각기 성명 발표

- 한국인도 히로시마, 나가사키 핵폭탄에 희생된 피폭자임, 북한의 핵 실험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노력해 온 여성들의 희망을 깨뜨리는 행위이며, 생명과 평화에 근본적으로 반하는 어떠한 핵실험도 인정할 수 없음.
- 북한의 핵실험이 가져올 동북아의 핵도미노에 대한 우려 표명, 북핵문제는 평화적 대화를 통해, 한반도 체제 형성의 과정에서 해결되어야 함 천명

-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을 ‘여성6자회담’ 모델로 구상, 2007년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 방문 여성6자회담 소개, 네트워크 활동
- 2008년(서울), 2009년(워싱턴) 2010년(서울), 2012년(서울)에서 개최
- 전략회의, 세미나, 로비활동(의회, 대사관, 정부부처 방문 등)

성과 (1) 여성의원, 학자, 시민사회가 진행한 1.5 트랙 차원의 한반도 평화체제 형성 과정에 여성참여 모델을 발굴하고 한국여성운동의 글로벌 리더십 향상

에 기여함

- (2) 여성, 평화, 안보에 관한 유엔안보리 결의안 1325호를 플랫폼으로 하여 동북아 5개국 여성들이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 평화체제에 관한 국제 연대 활동을 전개할 수 있었음

한계 (1)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에 관한 동북아 여성들의 참여를 촉진하는 지속적인 의제 개발, 자원 마련, 실무 역량의 한계로 지속되지 못함

- (2) 남북관계의 경색이 지속되면서 북한여성들이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함으로 회의의 동력이 약화됨

- (3) 평화체제, 평화과정에 대한 여성 참여에 대한 모델 발굴이 이뤄지지 못함

② DMZ 여성평화 걷기 (2015~2018)

- 2015년 5월 24일 노벨평화상 수상자, 국제여성평화 활동가 30여명이 평양에서 개성-판문점을 통과하여 남쪽으로 넘어옴 : 국제여성평화운동이 경색된 남북관계를 돌파하여 판문점을 통과함으로써, 남북한에 여성평화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함
- 여성평화 걷기는 2018까지 국내여성평화운동이 연대하여 진행함 특히, 경기도 여성단체가 참여, 대규모가 참여하는 걷기행사를 규모있게 진행할 수 있었음
- 2019년부터 국제여성평화운동이 "Korea Peace Now! Women Mobilizing to End the War" Women-led Korea Peace Campaign으로 전환되어 국내여성단체와 연대 구축
- 한국 - 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 조직(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YWCA연합회, 전국여성연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참여)

성과 (1) 노벨평화상 수상자, 국제여성평화활동가들의 DMZ 평화걷기를 통해 한반도 평화문제에 대한 국제여성평화운동의 참여와 연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계기. 한반도 평화 문제에 대한 인식 공유, 전 세계에 한반도 평화를 위한 지지자 그룹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원이 마련됨

- (2) 미국 내 교포한인 여성들의 평화리더십 향상으로 향후 미국정가와 유엔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어드보커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됨

과제 (1) 2015년의 DMZ 통과와 여성평화걷기 행사에 대규모의 참석, 사회적 관심도가 증가했고, 여성단체들이 연대하여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나, 국내여성평화운동의 역량강화로 전환되는 데 한계를 지님

- (2) 국내여성평화운동이 남북여성교류와 국제여성운동과의 연계 속에서 한반도 평화체제와 평화과정에 여성참여 모델 발굴, 로컬-글로벌 여성운동 네트워킹, 여성평화운동 전문가 양성 등 역량 강화 등의 과제를 지님

4) 갈등해결훈련과 평화통일교육 제도화

한국사회 갈등해결 훈련 프로그램 도입과 확산은 평화여성회, 여성연합, 민족회의가

2000년 초반 미국친우봉사회(AFSC)의 지원을 받아 약 2년 간에 걸친 훈련프로그램을 통해 20여명의 갈등해결전문가를 양성한 결과, 한국사회 갈등해결 훈련프로그램을, 청소년 갈등해결 프로그램, 포레조정, 중재, 회복적 정의, 평화커뮤니티 등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는 한편, 통일교육원의 연구용역으로 평화교육과 통일교육의 결합, 해외 평화교육 사례의 한국적 적용 방안 모색, 학교 통일교육에 평화교육적 방법론 적용 등을 통한 평화교육 내용과 방법론을 통일교육에 적용 및 공교육에 평화교육 반영과 같은 담론적 노력, 제도화 노력이 지속되었다. 그 결과 경기도 교육청의 민주시민교육 교과서, 통일시민교과서에 평화교육의 내용과 방법론이 반영되었고, 시민사회의 평화교육 확산 노력은 2018년 통일교육원에서 발간한 『평화·통일교육, 방향과 관점』에 평화교육이 통일교육에 공식적으로 도입되는 성과로 나타났다.

여성평화운동 영역에서 시작된 갈등해결과 평화교육은 한국사회 공론화, 사회적 대화 모델로 발전되었고 갈등해결훈련 전문가들이 공론화와 사회적 대화 프로세스에 전문가로 참여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성인지적 관점이 평화통일교육, 젠더와 협상훈련, 젠더와 평화훈련 영역은 연구, 학습, 훈련 프로그램이 아직 미흡한 형편이다. 젠더 트레이닝이라 성인지 감수성 교육,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과 평화교육의 이론과 방법론의 기계적 결합을 넘어서, 한국의 분단상황, 분단폭력, 군사주의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과 ‘여성, 평화, 안보’(Women, Peace, Security) 결합 등을 통해 젠더와 평화·통일교육에 대한 이론과 내용, 방법론 개발을 이뤄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고 있다.

3. 한반도 평화체제 형성과 여성평화운동의 향후 과제

여성·엄마 민중당이 지난 4월 25일 판문점선언 1주년 기념하여 발표한 ‘모두의 공동 번영과 평등을 위한 민중당 여성주의 평화통일 10대 요구안’은 판문점 선언 이후 지난 1년 동안 여성평화·통일운동 분야에서 제안된 평화통일 의제를 모두 모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 요구안과 함께 한반도 평화과정에서 성평등한 한반도 구축이라는 아젠다를 현실화 시키기 위한 성평화운동의 향후 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주의, 성인지적 관점, 여성평화안보 의제의 맥락에서 한반도 평화과정, 평화 체제, 평화협정, 비핵화 등 개념과 내용, 성인지적 개입 전략, 비전과 정체성 수립, 대중적 소통언어 발굴

- 2000년 UNSCR 1325 결의안 채택과 2014년 국가행동계획이 수립되어 이행되고 있으나, 아직 여성평화안보는 한반도 분단 해체와 평화 구축 과정의 언어로 전환되지 못했다. 여성평화운동 단체나 활동가만의 영역에서 보다 대중적 언어로, 일상에서 경험될 수 있는 여성들의 평화와 통일 의제로 재구성되고 재탄생될 때 여성평화운동의 대중화와 일상화, 즉 생활세계 속에서의 여성평화운동이 확산될 것이다.

둘째, 성평등한 한반도를 함께 만들 북한여성과 신뢰 관계 수립하기

- 지난 30년의 남북여성교류는 부침의 과정에도 불구하고 ‘전쟁반대’, ‘6.15 공동선언 실천’, 일본군 ‘위안부’ 문제 공동해결 등에 목소리를 모으며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과정 속에서 지속되어 왔다. 그렇지만, 남과 북이 여성들이 상대방에 대해 얼마나 관심과 필요에 대해 이해를 증진시켰는지, 한반도의 평화 프로세스에 기여했는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공유했는지 등에 대한 실질적 성과에 대한 답변은 여전히 미흡하다. 남쪽의 여성평화·통일운동은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를 실현시키기 위해 북한여성들과 협력하는 모델을 발굴해야 한다. 특별히 한반도 주민들의 인간안보를 실현시키기 위해, 남북여성들의 실질적 삶의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협력과제를 발굴하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신뢰를 형성함으로써 성평등한 한반도 형성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만들어 가야 한다.

3. 여성과 평화, 여성과 통일 분야 전문활동가 양성과 대중적 확산을 위한 조직 강화

- 지금까지 여성평화통일운동은 소수 전문가, 학자, 활동가의 헌신적 노력을 통해 유지되어왔다. 지속가능한 여성평화통일운동을 위한 재정기반 마련과 여성평화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개발과 확산으로 참여하는 젊은 활동가, 전문가가 확대되어야 한다. 이것은 결국 여성주의 평화통일운동, 생활세계 속의 여성평화운동의 확산과 연관되어 있으며, 특별히 급격히 변화하는 한국의 사회문화적 조건 속에서 여성평화운동이 어떻게 여성들의 고민과 필요에 대답하는지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한 지속적 노력, 기금 조성, 정부, 지자체와의 협력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 한반도 평화과정에 성인지적 개입과 참여를 위한 활동

(1)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 + 여성가족부 등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성평등한 한반도 의제 논의를 위한 민관협력거버넌스 구축

- 통일부, 외교부에 양성평등정책 담당 부처 신설(국방부는 2019년 5월 초 신설)
- 여가부에 남북여성협력정책 담당 부처 신설
- 성평등한 한반도 민관협력체 총괄 부처(국무총리실 혹은 청와대 국가안보실 등) 신설

(2) 안보리결의 1325 국가행동계획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예산 배정 의무화

-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을 통해 예산 배정할 수 있도록 함
- 여성·평화와 안보에 관한 유엔 안보리 결의 1325에 따른 국가행동계획 수립 및 이행평가·심의 의무화 내용에 예산안 배정과 사용 등 국회보고 의무화

(3) 남북교류협력기금에 성인지 예산 배정 의무화

- 통일부, 재경부, 국회, 남북여성교류 단체 등 논의 구조 마련
- 남북교류협력기금 성별영향 평가 실시
- 남북교류협력기금 성인지 예산 배정 등

■ 북한여성과 신뢰수립을 위한 활동

(1) 남북여성교류와 성인지적 협력의제 발굴

- 대북제재의 인도적 영향, 특히 여성과 아동에 대한 영향 연구와 의제화
- 연례적 식량위기 대응 메커니즘 마련
- 남북교류협력기금, 지자체 교류협력기금 등을 통한 북한여성과 아동 지원 시스템 구축
- 남북여성 경제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 프로그램 개발
- 개성공단 파일럿프로그램 운영

(2) 한반도 평화과정에 남북여성 참여모델 구축

- 남북여성교류, 유엔여성지위위원회, GPPAC, CEDAW, Beijing+25, UNSCR 1325 등 다양한 통로를 통합하는 플랫폼 구축으로 한반도 평화과정에 남북여성협력과 참여 모델 개발

■ 한반도와 동북아의 비핵평화 다자안보 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활동

- (1) 한-일 여성연대, 한-중-일 여성연대, 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와 국제여성평화운동 연대를 통한 지속가능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한 성인지적 관점의 의제 발굴, 행동전략 수립과 실천 지속 등
- (2) 동북아 군비현황과 군비경쟁과 인간안보, 여성복지와의 상관성 연구와 평화군축 운동 전개

■ 기록, 연구, 학습을 통해 평화운동 기반 마련하기

(1) 여성평화·통일운동의 역사를 공적 기록·역사에 편입시키는 활동

- 여성평화·통일운동의 기록, 통합적 정리, 여성평화·통일운동사 발간
- 평화여성회의 『한국여성평화운동사』(2005년) 이후 활동, 한국여성단체연합 30년사, 한국YWCA 100년사, 교회여성연합회, 통일연대 여성위원회-전국여성연대 역사 등
- Naver, Daum 등 포털사이트에서 주로 활용되는 『한국문화대백과사전』, 통일부 홈페이지의 ‘남북사회문화교류’ 분야에 여성평화·통일운동 기록, 내용, 사진/영상 등 포함
- 단체나 그룹 차원의 여성평화·통일운동사가 아닌 전체 여성운동의 역사와 자원

으로 통합하여 역사성, 정체성, 맥락성, 방향성을 만들어 가는 것이 요청됨

(2) 변화하는 북한사회와 북한여성 이해를 위한 학습공동체 형성

- 북한사회의 시장화, 정보화와 여성의 변화와 발전에 대한 정보 공유
- 북한사회 여성 교육 현황 이해
- 비핵화 협상의 주역으로 참여하는 북한 여성엘리트 양성과정 이해
- 남북여성교류에 드러난 북한여성 정치적, 사회적 인식 이해 등

(3) 분단폭력과 젠더폭력의 상관성 연구

- 분단폭력에 대한 젠더 분석
- 분단과 군사주의, 여성혐오, #미투의 상관성 연구
- 대중적 언어로 소통할 수 있는 교육용 자료 발갈

(4) 젠더와 평화교육 연구, 전문가 양성, 학습매뉴얼 개발 등

- 여성과 협상, 여성과 중재 관련 연구
- 여성 협상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개발
- 젠더과 평화교육 전문가 양성
- 젠더와 평화통일교육 학습 매뉴얼 개발 등

[참고 자료]

‘모두의 공동번영과 평등을 위한 민중당 여성주의 평화통일 10대 요구안’

(1) 평화군축, 모병제 도입 등 통일시대 대비 법제도 정비 및 예산 확충

- 판문점선언 3조 2항에서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합의. 군 병력을 줄여나가는 과정과 함께 징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로 전환
- 올해 1조389억 원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방위비분담금이 1조 이상 남고 있는 상황에서 천문학적인 무기구매금액을 평화기금으로 전환 조성
- 또한 통일과정에서 법률 및 가족법 등 여성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데서 남북의 차이점을 인지하고 공동의 해결과제를 모색해야 한다.

(2) 정부 및 지자체 통일관련 기구에 여성대표성 단계적 남녀동수 실현

- 통일부 사회문화협력과에 여성 비중을 높이는 등 현존하거나 구성될 통일관련 기구에 여성비율을 30%실현부터 단계적으로 남녀동수를 실현해야 한다.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위원회 산하에 여성분과 설치, 교류협력 각 분야별 위원회 및 실무기구 등에도 여성들의 참여가 비중 있게 보장되어야 한다. 정부당국간의 실무회담 및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성의제가 실질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3) <남북여성교류협력위원회>(가칭)설치로 남북여성교류협력사업의 제도화

- <남북여성교류협력위원회>(가칭)를 설치하여 남북여성교류협력사업을 총괄하고 제도화와 지속가능성을 담보해야 한다.

(4) 남북여성교류협력기금의 성인지적 예산 우선 배정

- 남북협력기금의 일정 부분을 남북여성교류협력 기금으로 배정해야 하며, 남북교류기금법 집행에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하는 등 관련법과 제도가 정비되어야 한다.

(5) 통일시대를 대비한 여성관련 기구의 정비 및 거버넌스 구축

- 통일부는 조직구성에서 남북여성교류협력사업 업무와 경험을 가진 다양한 여성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여성가족부는 여성 평화 안보에 대한 활동을 총괄하는 위상을 가져야 한다.

(6) 남북여성교류의 인프라 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

- 북한사회를 이해하고 여성주의적 관점으로 교류협력에 적용하며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여성을 양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정부 및 민간차원에서 국제역량 및 여성통일전문가를 양성하고 대학 내 통일여성학을 개설하는 것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7) 남북여성교류협력사업의 풀뿌리화, 다양화

- 다양한 주제의 접근으로 사회단체를 비롯한 각종 관변단체, 풀뿌리 학부모, 여성들이 사회문화교류, 체육교류, 국제대회에서의 교류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 남과 북의 지역별, 학교별 자매결연, 남북 학부모, 여성들의 교류모임 등 다양한 계층별, 특성별 모임과 회합 등이 확산될 수 있다.

(8) 남북여성교류협력사업의 지속가능한 여성의제의 개발과 성인지적 발전

- 여성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의 의제 설정, 남북한 여성간 상호공통성이 있는 분야인 여성과 가족을 둘러싼 의제, 여성의 직업과 사회활동의 현실에 대한 이해 등을 교류협력 의제로 개발하고 추진하면서 남북여성들이 서로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9) 여성통일교육을 제도화하고 여성들의 통일의식을 높여야 한다.

- 정부 및 교육부는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과 실행방향을 정교하게 잡고 통일교육을 제도화해야 한다. 평화통일교육을 교과과정에 포함시켜야 하며 미래교사를 양성하는 대학교과과정에서부터 교사연수과정, 공무원 교육 등에서 통일교육을 중요한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실시해야하며 관리 감독해야 한다. 정부는 민간단체를 통한 통일교육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10) 정부 및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거버넌스에 여성참여 확대

- 정부 및 지자체는 통일과정에서 남남여성간의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여성들의 평화통일 역량 및 정책역량 강화에 힘써야 한다. 민간영역인 여성시민사회와 공동협력으로 남북교류협력 거버넌스에 여성참여를 확대하고 정보 및 자료수집, 정책생산 등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2019년 4월 25일 여성-엄마민중당

발표



- 1. 여성주의 외교 정책의 중요성과 방향**
조영숙 소장(한국여성단체연합 국제연대센터)
- 2. 시민사회와 의회의 새로운 모델 : 한반도 전쟁 종식
요구 결의안과 의회 로비 활동**
이현정 (WCDMZ Consultant/ US Organizer)
- 3. 한반도 평화와 UN, 여성참여**
고유경 (WILPF Consultant)
- 4. 여성평화운동과 분쟁지역의 여성참여와 한반도**
조영미(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 집행위원장)
- 5. 대북제제와 인도적 지원: 한반도 평화체제를
향한 여성의 역할**
최수산나 총괄부장(한국YWCA연합회 중점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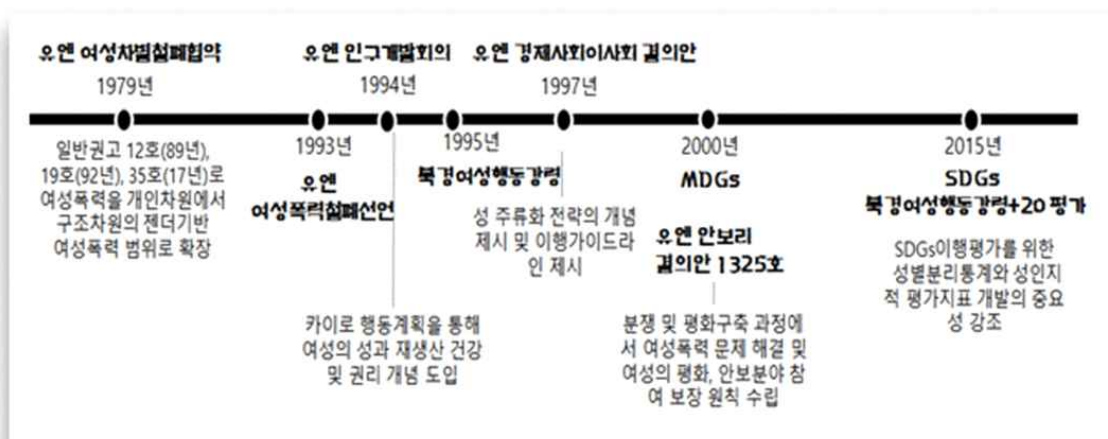
여성주의 외교정책의 중요성과 한국여성평화운동의 방향

조영숙 (한국여성단체연합 국제연대센터 소장)

1. 여성·평화·안보에 관한 유엔안보리 1325결의안을 통한 평화·안보 의제의 성 주류화

- 1995년 유엔 제4차 여성회의에서 채택된 북경여성선언 및 여성행동강령은 모든 유엔회원국에게 성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인 성 주류화(mainstreaming gender)의 이행을 요구함. 이후, 북경여성행동강령의 12개 주요관심분야 중 하나인 여성과 무력분쟁 분야에서 성 주류화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여성평화 운동가들 사이에서 제기되면서 ‘여성과 국제 평화와 안보 연합(The Coalition on Women and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이 결성되었고, 이들에 의해 유엔안보리를 향한 로비가 진행됨.
- 90년대에 “전쟁의 수단으로써의 성폭력”문제가 국제사회의 이슈로 대두하였지만, 문제해결과정에서 당사자인 여성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성평등 관점이 분쟁해결 및 평화건설 과정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한 여성평화 운동가들의 문제제기를 받아들인 유엔안보리는 2000년 10월 31일 여성, 평화 및 안보에 관한 오픈 세션을 개최하여 ‘여성평화안보에 관한 유엔안보리 1325결의안(이하 안보리1325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함.

※ 여성·평화·안보의 성 주류화를 향한 유엔의 글로벌 규범 전개과정



- 안보리1325결의안은 분쟁 예방, 분쟁 해결, 평화 유지 및 평화 구축과정에서 여성이 해야 할 혹은, 이미 수행하고 있는 중요한 역할을 인정하였으며, 여성의 완전

한 참여와 포함은 지역 사회 내의 평화와 안전을 성취하고 유지하는 모든 면에서 중요한 것으로 간주함. 또한 모든 행위자들에게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고, 모든 유엔 평화 유지 활동에 젠더 관점(gender perspectives)을 포함할 것을 촉구함. 또한 분쟁관련 이해당사자들에게 여성과 소녀들을 모든 유형의 성에 기반한 폭력, 특히 강간 및 폭력적인 총돌 시 특히 널리 퍼진 성폭력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함.

- 안보리1325결의안의 주요내용은 참여(participation), 보호(Protection), 예방(prevention), 구호 및 복구(relief and recovery)의 4개로 구성되었으며, 뒤이어 이행을 가속화하거나 또는 내용을 보충하기 위한 후속결의안이 2019년 5월 현재 8개 채택되어 현재 총9개의 여성평화안보 관련 결의안이 유엔 안보리에서 채택됨.

※ 안보리1325결의안의 4대 영역(pillars)

- ① 참여(participation): 국가, 지역 및 국제기구를 포함하여 모든 의사 결정 수준에서 여성의 참여를 증가시킬 것을 촉구. 갈등의 예방, 관리 및 해결을 위한 메커니즘, 평화 협상, 평화유지활동에 여성참여를 요구함.
- ① 보호(Protection): 난민 캠프와 같이 긴급 상황과 인도주의적 상황을 포함하여 성과 젠더에 기반한 폭력(sexual and gender based violence, SGBV) 으로부터 여성과 소녀들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조치를 요구함.
- ① 예방(prevention): 국제법 위반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을 기소하는 것을 포함하여 여성에 대한 폭력 예방을 위한 개입 전략을 개선 할 것을 촉구. 국내법에 따라 여성의 권리를 강화하고, 지역 여성 평화 운동 및 분쟁 해결 프로세스를 지원해야 하며, 이를 위해 “취약성을 줄이기 위한 젠더화된 접근법(gendered approaches to reducing fragility)” 채택을 요구함.
- ① 구호 및 복구(relief and recovery): 난민 캠프의 민간인 및 인도주의 지원의 본질을 존중하고 난민 캠프 및 정착촌 설계에 여성과 소녀들의 필요를 고려하는 등 젠더 렌즈(gender lens)를 통해 국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구호 및 복구조치 진행을 요구함.

※ 안보리1325결의안과 후속결의안 (총9개)

결의안(년도)	유엔안보리 결의안 주요내용
1325(2000)	• 평화협상/인도주의지원/평화유지활동/분쟁 후 평화구축 및 거버넌스 등 모든 과정에 젠더관점 포함과 여성참여 중요성
1820(2008)	• 전쟁수단으로 자행된 성폭력이슈를 평화안보 아젠다로 다루어야 한다는 점 확인
1888(2009)	• 분쟁관련 성폭력이슈 대응 팀에 젠더전문가를 포함시켜 성폭력에 대한 대응강화 촉구
1889(2009)	• 1325 모니터링과 평가지표 개발 촉구 • 유엔사무총장으로 하여금 평화건설과정 시 여성참여 현황보고서를 안보리에 제출토록 함
1960(2010)	• 분쟁 하 성폭력에 관한 모니터링과 보고 메커니즘 강조
2106(2013)	• 분쟁 하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책임성 강화 • 여성의 정치적/경제적 세력화 위한 노력 강조
2122(2013)	• 여성평화안보 아젠다 이행이 지체되고 있음에 우려 표명 • 국제적 평화안보문제에서 성평등과 여성 세력화가 핵심과제로 포함되어야 함 강조 • 분쟁이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의 특성을 고려한 안보리 활동 강조
2242(2015)	• 비공식 전문가 그룹의 활동 강조 • 재정과 제도개혁을 포함한 지속적 이행지체 문제 해결노력 촉구 • 폭력적 극단주의와 대테러활동에 여성평화안보 아젠다 통합요구 • 안보리의 여성평화안보 관련 활동방식 개선촉구
2467(2019)	• 남녀 모두에 대한 피해자 중심주의(survivor-centered approach), 피해자를 위한 지원정책의 강화, 남성피해자 지원 및 모니터링과 보고 시 남성피해자 고려 • 분쟁 하 성폭력 문제 대응에서 여성의 성과 재생산 건강돌봄서비스(women's rights to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care) 지원에 대한 미국반대

2. 2020년 북경여성행동강령 25주년과 안보리1325결의안 20주년의 동시적 평가

- 2019년 3월 개최된 제63차 유엔여성지위위원회(CSW63)에서는 2020년 예정된 북경여성행동강령 25주년과 1325결의안 20주년을 준비하는 “여성·평화·안보 행동의 가속화(The Road to 2020: Accelerating Action on Women, Peace and Security)”를 선포함. 특히 여성참여 및 젠더 관점이 평화협상과정, 인도주의 지원 활동, 평화유지활동, 분쟁 후 평화 구축 및 통치 전반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명시한 글로벌 규범을 지키지 않는 각국에 대해 ‘이행 격차를 줄여야 한다(close the implementation gap)’ 라는 요구가 제기됨.
- UN Women의 통계에 따르면, 1990년부터 2017년까지 중재(mediation) 책임자의 단 2%, 평화협상 대표 중 단 8% 만이 여성이며, 특히 시리아, 예멘 등에서 진행된 평화회담과정에서 여성은 완전히 배제되었다는 분석을 제기하면서, 1325 결의안 20주년을 앞두고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는 6개 문제영역을 제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시민사회와 여성인권옹호자에 대한 보호 (protecting women human rights defenders and civil society) ① 여성·평화·안보 아젠다에 대한 재정 지원의 확대 (expanding financing for the women, peace and security agenda) ① 평화유지활동 관련 제복을 입은 여성의 수를 증원 (increasing the number of women in uniform)

- ① 분쟁회복 과정에서 여성의 경제력 확보를 촉진 (promoting women's economic recovery in post-conflict contexts)
- ① 젠더 응답적인 분쟁 분석과 기획의 표준화 (standardizing gender-responsive conflict analysis and planning)
- ① 젠더 포괄적인 평화 과정과 협상의 촉진 (promoting gender inclusive peace processes and negotiations)

- 2017년 OECD/DAC(개발원조위원회)는 분쟁으로 인해 취약해진 국가의 성평등과 여성세력화를 위한 공여국의 과제를 연구해서 다음과 같은 권고를 제기함.

- ☞ 취약상황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성 평등 관점 변화가 필요, 즉 '변화의 주체로서의 여성'이 강조되어야 함.
- ☞ 수동적 희생자나 수혜자가 아닌 평화구축 및 국가건설의 적극적인 행위자인 여성이 정치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여성에 대한 지원과 역량강화 요구됨.
- ☞ 사회규범을 포함한 불평등한 젠더 권력관계와 취약성의 관계에 대해 초점을 두어야 함. 젠더규범, 특히 남성의 행동규범 개선노력 강조되어야 함.
- ☞ 젠더 불평등이 갈등과 취약성을 어떻게 형성하는지, 젠더-분쟁-취약성 사이의 모든 연결 고리를 파악한 후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한 정책프레임을 형성해야 함.
- ☞ 젠더 불평등-분쟁-취약성을 촉발시키는 권력 관계를 이해하도록 젠더 전문가와 협력해야 함.
- ☞ UN 안보리결의안 1325 국가 행동 계획(NAPs)과 평화 및 안보에 관한 국가기관 전반에 걸친 프레임과 거버넌스 참여자, 전문가 사이의 통합성 및 협력을 강화해야 함.
- ☞ ODA 공여국과 수원국의 UNSCR 1325 NAP 활동을 효과적으로 연계해야 함.

- 여성평화안보 분야의 성 주류화를 이행한 대표적인 국가인 스웨덴은 2014년부터 페미니스트 외교정책(Feminist Foreign Policy)에서 제시된 7대 목표를 이행하고 있음.

- ☞ 목표1: 모든 여성과 소녀들이 인권을 완전히 향유하도록 (Full enjoyment of human rights by all women and girls)
- ☞ 목표2: 모든 여성과 소녀들이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으로부터의 자유롭게 (Freedom from physical, mental and sexual violence for all women and girls)
- ☞ 목표3: 분쟁예방, 분쟁해결, 분쟁 후 평화 건설과정에 여성과 소녀들이 참여하도록 (Participation of women and girls in preventing and resolving conflicts and post-conflict peace building)
- ☞ 목표4: 여성과 소녀들이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정치적 참여와 영향력을 발휘하도록 (Political participation and influence of women and girls in all areas of society)

- ☞ 목표5: 모든 여성과 소녀들이 경제적 권리와 역량강화를 완전히 향유하도록 (Full enjoyment of economic rights and empowerment of all women and girls)
- ☞ 목표6: 여성 및 소녀들의 성과 재생산 건강 및 권리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and rights of women and girls)
- ☞ 목표7: 페미니스트 외교정책을 지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스웨덴 외교부 활동 (Swedish Foreign Service internal activities support and advance the policy)

3. 여성주의 외교정책의 확산과 한국여성평화운동의 과제

- 한국은 2014년 안보리1325결의안 이행을 위한 국가행동계획(National Action Plan, 이하 NAP)을 채택함. 2018년 12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유엔회원국 중 안보리1325결의안의 이행을 위한 국가행동계획(NAP)을 채택한 79개국(40%) 중에 한국이 포함되었음. 그러나 한국의 NAP는 이행모니터링과 평가를 시행하는 34개국(NAP 채택 국가 79개국 중 43%)과 비교해서 형식적인 이행을 하는 것으로 평가됨.
- 식민지경험과 전쟁경험, 그리고 경제성장과 민주화 과정에서 많은 분쟁을 경험한 한국은 분쟁 하 성폭력과 젠더 권력관계와의 연계성에 대한 한국사회의 역사적 경험에 대한 분석을 충분히 진행하지 못한 상태이며, 동시에 글로벌 규범을 통해 제시된 분쟁해결과 평화구축 과정에서 여성의 역할에 관한 사회적 인정(recognition)을 위한 합의노력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 상태임. 결과적으로 여성 평화운동에 대한 사회적 인정에 기초한 정책적, 재정적 지원의 부재 속에서 여성 참여 및 젠더관점 크로스커팅을 지속적으로 요구한 여성평화운동이 있었지만, 매우 제한적으로 진행될 수 밖에 없었음. 따라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진행되는 현 시점에서는 글로벌 여성평화안보 패러다임에 기초한 여성참여와 젠더관점 통합을 위해 노력하는 여성평화운동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본격적으로 요구됨.
- 현재 국제사회는 2019년 5월 현재부터 2020년까지 2년에 걸쳐서 추진될 예정인 북경여성행동강령 25주년과 안보리1325결의안 20주년을 기념하면서, 글로벌 여성인권 규범에 따른 여성·평화·안보 프로세스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에 있음. 특히 유엔은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1979), 인구개발회의 행동프로그램(ICPD PoA 1994), 북경여성행동강령(BPfA 1995),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2015) 등 글로벌 성평등 규범 속에 포함된 여성평화안보 아젠다의 이행의 가속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이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여성평화운동에 대한 지원을 강조하고 있음.

- 특히 OECD/DAC 회원국이자 ODA 공여국인 한국은 글로벌 차원에서 분쟁 하 성폭력 방지와 여성참여 확대를 위한 인도주의 지원사업과 개발협력 사업에 참여할 성평등 전문가 인적 자원(풀)을 양성해야 함. 현재 한국은 외교부 산하에 여성단체 대표들이 참여하는 “분쟁 하 성폭력 방지를 위한 여성평화 이니셔티브”를 구성해서 한국의 국제사회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 사업 및 국제개발협력 사업과정에서 여성평화안보에 관한 글로벌 규범에서 제시된 분쟁 하 성폭력 방지 및 여성참여와 젠더관점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이 노력을 바탕으로 향후 한반도의 분쟁 하 성폭력 대응 경험과 평화협상 및 건설과정에 여성참여 과정에 관한 분석과 평가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그 결과를 글로벌 차원의 인도주의 지원과 개발협력 사업에 통합하는 것과 함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과정으로까지 연계시킬 필요가 있음.
- 마지막으로 글로벌 성평등 규범의 이행을 가속화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동참하는 한국여성단체의 활동계획을 소개하는 것으로 이 글을 마치도록 하겠음. 당장 오는 8월 12일~ 13일 양일간 서울에서 한국, 중국, 일본의 여성단체들이 참여하는 동북아지역 북경여성행동강령 25주년 기념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임. 뒤이어 2019년 11월 방콕에서 개최될 아태지역 베이징25주년 기념 포럼에 참가, 2020년 3월 개최될 제64차 유엔여성지위위원회에 참가, 2020년 6월 프랑스, 멕시코 등에서 동시에 개최예정인 글로벌 성평등 포럼에 참가, 2020년 9월 유엔총회에서 진행될 베이징25주년 기념 총회에 참가, 2020년 10월 유엔안보리에서 여성평화안보에 관한 1325결의안 20주년 기념 공개토론 등 향후 2년간 진행될 글로벌 흐름에 동참할 예정.

시민사회와 의회의 새로운 모델: 한반도 전쟁 종식 요구 결의안과 미 의회 로비 활동

이현정 (WCDMZ Consultant: US Organizer)

1. 정세 평가: 북미대화 교착과 미래 전망

a. 현 교착상태의 원인

- 북미대화는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 교착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 지난 3월 로이터통신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하노이 정상회담에 앞서 다음과 같은 협상 조건을 명시한 서한을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북한 핵무기 및 핵연료를 미국으로 이전

북한 핵 프로그램의 완전 공개 및 미국과 국제 조사단의 전면적 접근 보장

모든 관련 활동 및 새로운 설비 공사 중단

모든 핵 인프라 해체

모든 핵 프로그램 관련 과학자 및 기술자들을 상업 활동으로 전환

- 미국은 북한이 이 제안을 받아들일 리 없음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이다.
-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3개월이 지났지만 북미 간에는 이후 어떠한 대화도 진행되지 않았다.
- 미국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원칙에 의거한 처음의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으며 지난 4월 캠프 험프리(Camp Humphreys)에서 진행된 사드(THAAD) 훈련을 비롯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이어가고 있다. 북한은 이에 사드 시스템을 회피할 수 있는 자체 개발 단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로 응수했다.

b.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는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

- 지난 4월 12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북미정상회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밝혔다.

베트남 정상회담의 반복이 될 뿐이라면 3차 정상회담 추진에는 관심이 없다.

더 이상 경제제재 해제에 관심이 없으며 북미정상 회담에서도 이 의제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

올해 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제안을 들고 대화에 복귀할 때까지 기다릴 것이다.

c. 제2의 “화염과 분노(fire and fury)” 위기를 방지하기 위한 6개월의 시한

- 그렇다면 미국이 지금과는 다른 제안을 들고 오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될 것인가? 한 가지 가능한 해석은 북한이 핵무기 및 장거리 미사일 생산과 테스트 중지 약속을 더 이상 준수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 앞으로 6개월 내에 외교적 해결 노선으로 복귀하지 못한다면, 제2의 “화염과 분노” 위기를 맞이하게 될 수도 있다. 특히 볼턴(Bolton)이 한반도 정책에 대해 더 강력한 결정권을 행사하게 될 경우 이번 위기는 2017년보다 위험할 수도 있다.
- 볼턴은 지속적으로 대북 전쟁 노선을 주창해왔다. 2018년 2월에는 심지어 남북이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역사적인 화해 분위기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볼턴은 월스트리트 저널 기고글에서 “북한 핵무기로 인해 제기된 현재의 ‘필요성’에 미국이 선제공격으로 대응하는 것은 지극히 정당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미국의 모든 정보기관이 상반된 평가를 내놓고 있음에도 볼턴은 여전히 대북 군사 공격이 실현 가능하다고 믿고 있다.

2. 소개: 한반도 종전과 평화를 위한 여성행동

a. 평화를 위한 여성의 비전

- 한국의 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Korean Women’s Movement for Peace), 평화와 자유를위한여성국제연맹(Women’s International League for Peace and Freedom), 위민 크로스 디엠지(Women Cross DMZ), 노벨 위민스 이니셔티브(Nobel Women’s Initiative) 등 네 개의 여성단체들이 함께 모여 한반도 전쟁 종식을 촉구하고 여성의 평화 비전을 주창하는 국제 캠페인을 출범시켰다.
- 여성의 시각으로 평화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한반도 분쟁을 국가 안보라는 틀이 아니라 인간 중심의 안보로 바라본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우리를 진정으로 안전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더 많은 대량살상무기인가, 아니면 일자리, 깨끗한 식수, 보건, 주택, 교육 접근권, 기아와 빈곤, 전쟁위협 종식, 기후변화 해결을 위한 협력과 같은 것인가라는 보다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 인간 안보에 우리의 힘과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서는 먼저 워싱턴 정가의 끊임없는 전쟁 정책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 거의 70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한반도 전쟁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 계속되고 있는 전쟁이다. 끝나지 않는 전쟁의 비용은 헤아릴 수 없이 크다. (더 이상 한반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미국 본토까지 위협하고 있는) 끊임없는 전쟁 위협, 농민들의 삶의 기반 철거 등 미군 기지의 토지 수용 문제와 환경오염, 기지촌에서 일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 성폭력, 인간의 필요보다 국방의 필요를 앞세우는 국가 자원의 전용, 국가 안보 강화 논리에 약화되는 민주주의에 이르기까지 열거하자면 끝이 없다.

b. 미국 캠페인

1) 워싱턴 정가 사고방식 변화

- 미국 캠페인의 핵심 목표 중 하나는 워싱턴 정가의 사고방식을 오로지 비핵화만을 고수하는 것에서 평화의 필요성을 인지하는 쪽으로 바꾸는 것이다.
- 도전과제:

한반도 전쟁은 미국에서 “잊혀진 전쟁”으로 불린다.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한반도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아예 관심조차 없다. 2018년 미 상원의원 린지 그래함(Lindsay Graham)은 한반도에 전쟁이 재개된다면, “저 먼 나라”에서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을 것이라고, 다시 말해 미국에 있는 대부분은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북한의 2017년 대륙간 탄도 미사일 실험으로 미국이 충격에 휩싸인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핵탄두를 장착한 북한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도 있다는 것은 전쟁 위협이 더 이상 그저 “저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는 의미였기 때문이다. 냉전 이래 처음으로 미국인들은 핵공격의 직접적인 위협을 실감한 것이다.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미국이 한반도 전쟁의 당사국 중 하나였으며 지금도 그러하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북한 붕괴시를 대비해서 미국이 정기적으로 전쟁연습을 실시하고 있다는 사실도, 이 훈련에는 선제 핵공격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한다. 한반도 문제라고 하면 오로지 북한 핵무기 제거에만 관심이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핵 없는 한반도(한반도 비핵화)”를 만들 의무가 미국에게도 있음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워싱턴 정가의 정치 지도자들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한반도 전쟁이라고 하면 남과 북 사이의 전쟁이라고만 생각하기 때문에 평화협정 논의에 왜 미국이 참여해야 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국인들이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을 알게 되면 깜짝 놀란 반응을 보인다.

- 미 의회와의 긴밀한 협력 활동을 통해 우리는 한반도 전쟁 종식을 촉구하는 미 하원 결의안 152호를 발의했다. 워싱턴 정가에 비핵화보다 평화를 더 중요하게 논의할 정치적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 캠페인의 목적이다. 현재 30명의 공동 발의

자(co-sponsors)를 확보했으며 올해 말까지 100명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 우리의 주요 메시지:
- 미국인들은 끝없는 전쟁에 지쳐 있다. 한반도 전쟁은 가장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분쟁이다. 이제 한반도 전쟁을 종식시킬 때가 왔다. 한반도의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 남북은 지난해 판문점에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자는 데에 합의했다. 남북은 DMZ 비무장화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진행해왔다. 무엇보다도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 평화협력 정책을 지지하고 있다.
- 또한 우리는 한국 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와 공동으로 지난 3월 한국의 여성 국회의원과 시민사회 대표단의 워싱턴 DC 방문 캠페인을 진행했다. 미국과 한국의 여성 의원들이 동등한 파트너로 직접 만나 평화를 위한 협력을 논의했다. 한국이 미국의 군사적 이해관계에 종식되는 불평등한 관계를 벗어나 여성들이 공동의 평화 비전을 향하여 동등한 파트너로서 함께 나아가는 관계로 한미동맹을 재정의 하는 “페미니스트 평화”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 또한 우리는 2020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우리의 한반도 평화 메시지를 모든 대선 후보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부터 모색하고 있다.

2) 한반도 평화 주장을 위한 전국 풀뿌리 네트워크 조직

- 현재 애틀랜타,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보스턴, 뉴욕, 필라델피아, 워싱턴 DC 등 여러 도시들을 중심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전국 풀뿌리 네트워크 캠페인 팀들을 조직 중에 있다.
- 한반도 평화 필요성을 미국 상하원 의원들에게 알리기 위해 재미동포들과 미국의 평화/반전 활동가들이 협력해서 활동하고 있다.
- 마지막으로, 우리는 재미동포 학자들과 협력하여 학술회의에서 한반도 평화 선언을 발표하도록 하고 한반도 전쟁에 대해 알리는 교육 이니셔티브를 출범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3. 공동 행동 제안

1) 한반도 평화를 위한 풀뿌리 민중의 목소리 조직

마침내 한반도 전쟁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도록 미국과 한국 정부에 압력을 행사하기 위한 광범위한 시민사회운동을 만들어내기 위해 교육과 조직 등의 활동에서 미국과 한국의 여성들이 앞장설 수 있기를 희망한다.

2) 트럼프 대통령에게 리비아 모델 폐기 및 외교적 해결 촉구

제2의 화염과 분노 위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외교적 해결 노선으로 복귀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과 한국의 여성들이 리비아식 비핵화 모델을 폐기하고 공동 신뢰구축을 통한 평화와 군축 프로세스로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는 싱가포르 약속을 존중할 것을 트럼프 행정부에게 한 목소리로 요구해야만 한다.

3) 동북아 평화와 군축을 위한 공동 비전 마련

평화를 원하는 이라면 누구나 한 마음으로 노력해야 하는 목표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는 동북아시아 평화와 군축을 위한 다자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 동북아 지역에서 냉전 시대의 분단을 종식시키고 인간 안보를 중심으로 하는 역내 평화를 위한 공동의 비전을 만들어나가는 방법을 논의할 때 지역 미래의 중요한 이해당사자의 하나인 우리 여성들이 동등한 파트너로서 함께 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와 유엔(UN), 여성참여

고유경 (WILPF 컨설턴트)

1. 코리아/한반도 문제와 유엔

1) 코리아(Korea)의 독립과 유엔

- 1948년 8월 대한민국 정부 수립, 9월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정부 수립
- 1948년 12월 3차 유엔총회, 대한민국을 한반도에서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
- 1949년 남과 북의 정부는 각각 유엔 가입을 신청하였으나 거부됨 (1949년 1월 남한, 2월 북한의 유엔 가입 신청)

•

2) 코리아 전쟁과 유엔

- 1950년 유엔 안보리 결의, 82호(6월 25일) 83호(6월 27일), 84호(7월 7일)
- 유엔 안보리 84호 결의 - 회원국에게 미국 지휘의 통합사령부 아래에서 군 병력과 여타 지원 제공을 권고, 미국이 통합사령부 사령관을 지명할 수 있도록 요청, 미국의 통합사령부가 참전국의 국기와 함께 유엔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
- 1950년 5차 유엔총회, 12월 코리아통일부흥위원회(UNCURK, 1950-1973) 설치 결의 - 한반도를 대표하는 독립된 민주 정부의 설립 목적

3) 정전협정과 코리아

- 1950년 5차 유엔총회, 12월 조속한 시일 내에 휴전방안 마련 권고 결의
- 1951년 7월 휴전협상 시작, 1953년 정전협정 체결
-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4) 남북 정부간 대화와 유엔 - 1970년대 유엔 총회 결의

- 7.4 남북공동성명
- 코리아 문제 관련 유엔총회 결의 - 남북 대화 환영 및 평화 통일 지향,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대체와 유엔군 사령부 해체 결의
- 한미연합사의 창설

5)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 국제적 탈냉전
- 남북 기본합의서 및 비핵화 공동선언, 유엔 공식 문서화¹⁾

- 남북 유엔 동시 가입 - 유엔 안보리의 권고를 통해 1991년 9월 제46차 유엔총회에서 결정함. 하나의 결의에 남과 북 두 회원국의 가입 결정을 다룸

6) 남북 정상회담과 유엔 총회의 환영 및 지지 결의

- 2000년 6.15 정상회담 및 2007년 10.4 정상회담과 관련 공동성명에 대해 남북 정부의 공동 결의안 초안 작성 및 채택 요청으로 유엔 총회 결의안이 채택됨²⁾.
- 한반도에서의 평화, 안전 및 통일에 대한 결의
- 2018년 4.27 판문점 정상회담 및 공동성명 관련 - 남북 정부는 공동으로 유엔 공식 문서로 등재하고 회람해 줄 것으로 요청함.

7) 북한 핵과 미사일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 - 제재위원회 중심으로

- 2006년 10월 제재위원회(1718 위원회) 설치를 포함한 안보리 결의 이후로도 19차례³⁾의 유엔 안보리 결의 채택.
- 핵무기·프로그램 포기(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이킬 수 없는 방식. CVID), 미사일/핵무기 물질과 기술 이전 금지, 자산 동결, 여행 금지, 무기 수출 금지, 북한 출입 선박 수색, 위반 화물 압수, 금융 서비스 제공 금지, 보조금·금융 지원·대출 금지, 과학 기술 협력 중단, 북 대사관·영사관 직원 감축, 북 관리·공무원 여행 제한, 북의 석탄, 철광, 납 수출 금지, 북의 해산물 수출 금지, 합작회사 설립 금지, 원유 수출 금지(*예외 조항)⁴⁾
- 제재와 관련한 안보리 결의에는 제재 사항뿐만 아니라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안보리는 문제 해결에 있어 평화적, 외교적, 정치적 해결 책무가 있으며, 안보리 회원국이나 여타 유엔 회원국들이 대화를 통한 평화적 포괄적 해법을 추구하는 것을 환영하고, 한반도 등 긴장 완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함.⁵⁾

1) Conference on Disarmament. CD/1147. 25 March 1992. Letter dated 20 March 1992 from the ROK and the DPRK addressed to the secretary-general of the Conference on Disarmament transmitting the text of the agreement on Reconciliation, Non-aggression and exchanges and cooperation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as well as the text of the Joint declaration of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2) 한반도에서의 평화, 안전 및 통일에 대한 결의. 55차 유엔총회. 2000년 10월 31일. A/RES/55/11. Peace, security and re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31 October 2000

한반도에서의 평화, 안전 및 통일에 대한 결의. 62차 유엔총회. 2007년 10월 31일 A/RES/62/5. Peace, security and re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31 October 2007

3) 이 중 9건은 전문가 패널 활동 관련. 2009년 제재 관련 전문가 패널 설치 결의. 그 후 9건의 전문가 패널 활동 또는 연장(1년 단위) 관련 결의 채택.

4) <표 2> 유엔안보리 대북 결의 목록. 「한반도 대전환, 대북제재와 한반도비핵화」, 서재정, 2018.12.11.

5) S/RES/2397 (2017)

2. 유엔 관련 한반도 평화 여성 캠페인

1) Korea Peace Now!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및 전쟁 종식을 위한 여성들의 행동 - 유엔 관련

- 2019년 3월 유엔 여성지위위원회(CSW, 뉴욕)에서 개최한 시민사회 토론회 - 세계 각지에서 온 200여명 참가⁶⁾
- 2019년 3월 한국 55개 시민사회단체, 유엔 안보리와 1718 위원회에 인도적 지원에 대한 대북 제재 해제 촉구하는 공개서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흔들림 없이 이어져야 합니다> 발송⁷⁾
- 2019년 5월 NPT 2020 검토 3차 준비 회의에서 개최된 시민사회 토론회
- 다양한 유엔 회원국들과의 면담
- 2020년 - 유엔 창립 75년, 북경선언(제4차 세계여성회의) 25년, 여성·평화·안보 유엔안보리 결의 1325 20년, 핵확산방지조약(NPT) 재검토회의(Review Conference)

2) 캠페인의 주요 주장

- 전쟁 종식과 관계 정상화, 평화협정 체결 등 평화구축
- 평화 협상 과정에 여성참여
- 탈군사화/비무장화
- 북한 사람들의 인도주의적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제재의 철회
- 안보의 재정의 - 전쟁과 군사주의에 기초한 국가안보 중심에서, 인간의 삶에 필요한 요구와 생태적 지속가능성에 기초한 여성주의 시각의 안보

3) 드러나는 쟁점

(1) 한반도 분쟁의 근원과 해법

- 정전체제(전쟁상태) vs 북한의 핵개발
- 종전 및 적대관계의 해소 vs 제재를 통해 최대 압박
- 한국 전쟁에서 유엔사 산하 참전국 16개 (호주, 벨기에, 콜롬비아, 캐나다, 이디오피아, 프랑스, 그리스, 룩셈부르크, 필리핀, 네델란드, 뉴질랜드, 태국, 터키, 남아프리카공화국, 영국, 미국) 및 의료단 지원국 5개(덴마크, 인도, 이탈리아, 노르웨이, 스웨덴) 등 21개 국가 중 19개 국가가 현재 북한과 외교관계를 맺은 수교 상태임. 프랑스는 외교관계를 맺지는 않았지만 평양에 문화교류 및 인도지원 협력을 위한 연락사무소를 개설하였음.

6) 동북아 여성들, 뉴욕에서 한반도 평화를 알린다. 63차 유엔 CSW NGO side event 참관기 - 김정수 (2019.03.28. 통일뉴스)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8258>

7) <https://www.peoplepower21.org/Peace/1619282>

(2) 지속가능한 협상, 비핵화, 한반도 평화 체제

- 평창올림픽과 군사훈련 중단 등 안전보장 조치 vs 제재의 효과
- 비핵화 협상의 안정적 조건인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협상 vs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vs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
- 한반도 비핵화 vs 북한의 비핵화
- 핵무기금지조약(TPNW) 가입, 동북아시아 비핵지대화, 영세중립

(3) 제재와 인도 지원

- 인도적 차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vs 전혀 영향이 없다.
- 인도지원과 개발협력
- 칠리 효과 (chilly effect) vs 구호가 필요한 다른 위기들의 영향
- 2019년 3월 유엔 안보리 제재위원회 전문가 보고서⁸⁾ - 유엔 기관, 국제 구호 단체, 유엔 회원국 등이 인도지원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제재 면제를 승인 받아야 하는 절차로 인해 지원 사업이 지연되는 부정적 영향을 미침. 화이트리스트 방식 제재 면제 시스템 건의
- 2019년 5월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식량계획(WFP)의 북한 식량안보 평가보고서⁹⁾ - 평가 보고서 중 ‘제재가 농업 생산에 주는 의도치 않은 영향 (UNINTENDED IMPACT OF SANCTIONS ON AGRICULTURAL PRODUCTION)’에 따르면, 2017년 12월 유엔 안보리가 부과한 제재가 기존의 것 중 가장 엄격하며, 해당 결의안에는 제재가 인도주의 차원에서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재가 농업생산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의도치 않은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무시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연료, 비료(질소와 인산염), 농기계, 장비 부품 등 농업 생산에 필수적인 특정 품목에 대한 수입이 제한된다는 것은 가장 분명한데, 연료나 전기, 양수 시설의 부족으로 제때 물을 대지 못하여 농작물 성장에 나쁜 영향을 주고, 트랙터 등의 장비 부족으로 생산한 곡물을 제때 창고나 탈곡 시설로 옮기지 못해 썩어 버려 생산한 만큼 수확하지 못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전기와 연료가 부족하여, 수확한 농작물을 썩지 않게 저장하여 관리하는 조치를 유지하기 어렵고, 다른 식품으로 가공할 수 있는 시설의 가동도 제대로 할 수 없어 농업 생산을 통한 식량 공급에 지장을 준다고 밝히고 있다.

8) 미국의 대북제재는 북한의 민생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http://www.vop.co.kr/A00001404427.html> ; Report of the Panel of Experts established pursuant to resolution 1874 <https://undocs.org/S/2019/171>

9) FAO and WFP. May 2019. FAO/WFP Joint Rapid Food Security Assessment,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Bangkok. 40 pp. Licence: CC BY-NC-SA 3.0 IGO.

여성평화운동과 분쟁지역의 여성참여와 한반도

조영미(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 집행위원장)

여성평화운동과 분쟁지역의 여성참여와 한반도

- 전 세계적으로 힘의 논리로 가득한 갈등과 분쟁은 가장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데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여성과 아동에 대한 불평등과 배제, 인도주의에 대한 부재 및 난민에 대한 인권유린이 자행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음.
-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시민사회 진영에서의 여성들은 끊임없는 분쟁 속에서 평화 협상에서의 중요한 역할을 해 왔음. 여성들은 정치적, 사회적 이슈를 공론화 하였으며 피해자들과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였고 협상 과정에서 당사자들 사이의 교량적 역할을 담당해 왔음. 뿐만 아니라 비공식적인 회담에 있어서도 적대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협상 테이블에 나올 수 있도록 했으며 신뢰와 대화를 통해 성공적인 평화를 이끄는 역할을 담당해 왔음(The Institute for Inclusive Security, 2009).
- 평화과정에서의 여성참여에 대한 논의는 여성차별철폐협약(1979년), 1995년 베이징여성회의의 베이징선언과 행동강령 등에 유엔안보리결의안 1325가 태동하는데 영향을 줌.
- 1995년 북경여성대회에서는 ‘과도한 군비를 줄이고 무장가능성을 통제하고’, ‘비폭력으로 분쟁해결을 도모하고 분쟁 상황 하에서 인권이 유린되는 상황을 감소시키고’, ‘평화문화를 배양하는데 여성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강조하였음.
- 1999년 International Alert은 100여개의 시민단체와 함께 “촌락에서 협상테이블까지: 여성이 만드는 평화(Women Building Peace)라는 전 지구적인 캠페인을 진행함.
- 이 외에도 UNIFEM의 여성과 폭력, 평화에 대한 연구보고서 발간 및 WILPF와 타 연대단체들이 공동으로 평화협상에 참여하는 갈등 중재자인 여성들을 위한 교육과 대화를 지원했음.
-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2000년 UNSCR1325의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으며 평화구축 과정에서의 여성참여 의무화의 중요성과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실천적 토대가 마련됨. 이에 따라 각 국가의 구체적인 행동계획이 구체화되었음.
- 2019년 1월 WILPF의 분석에 따르면 2019년 현재 79개국에서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노르웨이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의 국가행동계획을 최근에 발표한 것으로 나타남. 2019년 4월에 나미비아가 새로운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19년 4월에 개최된 여성평화안보 고위급 회의에서 9개의 회원국이 2020년 10월 까지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하기로 약속함 (<http://peacewomen.org/member-states> 참조).

- 2020년은 UNSCR1325 결의안이 채택된 지 20년이 되는 해임. 각 국가적으로는 많은 변화들이 있었고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하는 국가의 수도 늘어났고 그에 따른 여성 참여의 비율도 변화되었다고 할 수 있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과정에서 단순한 명목적, 숫자적 참여와 더불어 여성의 의미 있는 참여, 지속가능한 참여에 대한 진전을 가져와야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음.

한반도에서의 여성평화운동

- 한반도에서 여성들은 1970년대부터 반전 반핵운동에 앞장서 왔으며 방위비 삭감, 군축운동, 일본군위안부와 기지촌 여성 문제를 중심으로 전쟁과 군대, 여성과 인권 그리고 이러한 이슈들이 여성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한 다양한 연구와 논의들이 전개되어 왔음.
- 1990년대부터는 경계를 넘어 평화를 지향하는 다양한 실천적 시도가 이루어짐. 아시아 여성들과의 연대를 통해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남북 여성교류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해 왔음. 특히, 인도적 지원활동과 평화교육 등을 통해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 공론화 영역 등에서 소극적 평화를 넘어선 적극적 평화운동을 전개해 왔음.
- 2000년대부터는 국제적인 연대활동으로 여성평화 의제를 전 세계 여성들과 공론화하는 작업을 펼쳤으며 평화와 통일의 의제를 위한 포럼 및 대선의제 제안활동, 유엔안보리결의 1325의 국가행동계획 수립을 촉구하는 활동 및 후속활동을 전개해 정부와 시민사회의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역할을 담당해 옴
- 2008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진행된 동북아여성평화회의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의 모델을 여성 6자회담의 모델로 구상하고 서울과 워싱턴에서 각각 주요 의제와 전략을 토의하고 의회 등의 로비활동 등을 전개함.
- 한국여성단체연합과 평화를만드는여성회를 비롯한 여성단체들의 노력의 결과로 UNSCR1325 국가행동계획이 수립되었으며 성인지적 관점에서 분쟁 예방, 분쟁 이후의 재건과정, 평화구축 관련 전반적인 정부부처의 정책 수립에 영향을 미침.
- 1991년의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을 통해서 경계를 판문점을 넘었던 여성들의 운동을 이어 보다 국제적인 운동으로 확장시킨 2015년 DMZ 여성평화걷기가 진행되었으며 여성들의 평화를 향한 국제적 연대를 보다 공고히 함.
-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성평화운동은 지속성과 대중성, 여성들의 고유의

관심사를 젠더관점으로 보다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실질적 여성, 평화, 안보 분야에 있어 여성참여가 저조한 것 등을 한계로 보고 있음.

-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이라는 국정목표와 ‘신(新) 한반도 체제’를 제시하고 있음. 평화협력공동체와 경제협력공동체에서의 여성 참여와 인간안보 차원에서의 평화 논의를 활발하게 전개할 필요가 있음.

한반도 평화체제와 신(新) 한반도 체제

- 평화에 대한 논의는 4가지로 볼 수 있음. 무기 자체의 감축과 인간안보를 확보하는 군축과 인간안보, 정부차원의 외교뿐만 아니라 다자적인 외교체계를 구성하는 무력분쟁 방지와 평화적 이행, 인권과 인도주의의 법과 제도, 빈곤, 경제적 불평등, 인종적, 종교적, 갈등, 환경과 자원의 불평등, 폭력 평화의 문화 등으로 정의로운 관계의 구축을 통한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포함하며 한반도의 평화에 있어서는 이러한 논의들이 모두 중요하게 작동되고 있음.
- 국가 안보에 대한 대안적 개념으로 제시된 인간안보는 평화 안보, 경제발전 복지, 사회정의, 인권, 환경, 법치, 협치 등 상호 연관성과 불가분성을 포함하고 있음.
- 그러나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체제에 대한 논의는 주로 실질적인 군사적 긴장 완화, 핵문제에 집중된 ‘소극적 평화체제’를 논의하고 있음. 학자들도 한반도의 상황에서는 비핵화 평화프로세스를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고 북한과의 평화협정의 문제는 소극적 평화체제 이후의 장기적 과제로 바라보고 있음. 따라서 한반도에서 적극적 평화체제를 구축하기에는 시기상조로 보고 있거나 혹은 이를 적극적 평화체제의 도입단계로 바라봄(정성운 외, 2017). 뿐만 아니라 냉전구조 해체 과정에서 한반도 비핵화가 아닌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 집중하고 있음.
- 한반도 평화체제는 ‘정전체제를 대체하는 평화협정 등의 법적·제도적 평화보장을 통해 한반도에서 실질적이고 공고한 평화가 정착되고, 이러한 평화상태가 한반도 안보체제와 선순환 관계로 작동하고 있는 상태’로 볼 수 있음. 따라서 한반도 평화체제는 항구성을 가질 수도 있지만, 비핵화 프로세스의 진척 여부와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체제의 변화에 따라 평화체제의 내용과 성격 또한 변화 가능함(정성운 외 2017). 그러나 한반도 평화체제는 안정적인 안보체제와 선순환적인 관계를 가져야 하며 더 나아가 남북 관계의 실질적인 발전을 통해서 인간안보를 이루는 ‘적극적 평화체제’의 방향으로 준비되고 전개되어야 함.
-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3.1절 100주년 기념식에서 ‘신(新) 한반도 체제’를 제시하였음. 신한반도 체제는 ‘수동적 냉전질서’에서 ‘능동적 평화질서’로의 전환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일제의 강점과 샌프란시스코 체제를 통해서 강요된 지난

100년간의 한반도 질서를 벗어나 남북이 주도하는 새로운 100년의 신질서 수립에 대한 비전과 약속을 담고 있음(조한범, 2019).

- 이는 평화와 경제를 큰 두 축으로 하고 있음. 그간의 남북 대립과 갈등에 종지부를 찍고 새로운 평화협력 공동체로 나아가고자 하는 다짐이며 이념과 진영의 시대를 넘어 새로운 경제협력 공동체를 만들어 나아가고자 함. 구 한반도 체제와 신 한반도 체제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서구 열강에 의한 침탈과 냉전, 타자에 의해서 강요받았던 고난 등 열강들의 세력균형의 대상에서 실제적인 주체로의 전환으로 스스로의 운명은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것임.
- 즉, 남북이 공동으로 신뢰와 협력 속에서 한반도의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고 남북의 평화 더 나아가서는 동북아의 평화를 이루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음. 그리고 동북아 지역의 경제와 안보가 연계된 상호의존적이며 공동의 문화를 형성하고 그 가치를 창출하는 것에 대한 비전을 수립하고 있음.
- 이러한 비전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당사자로서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또한 남북의 생활공동체를 형성하고 협력적인 공존과 공영의 관계를 형성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소극적 평화체제에서 종국의 평화체제 즉, 적극적 평화체제로의 자연스러운 연결이 이루어져야 하며 한반도의 평화회복과 구축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의 기반을 만들어야 함.



출처: 민족화해(2019).

- 기존의 평화유지 중심의 개입을 1세대 평화활동이라고 한다면 2세대 평화활동은 분쟁에 개입하는 전통적 평화유지(peace keeping)에서 벗어나 평화를 조성하고(peace making), 회복하며(restoring), 나아가 이를 위해 적절한 환경을 구축하는(peace building)단계로까지 확장, 발전하고 있음.
- 평화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 평화유지(Peace Keeping)가 가지는 한계에 따라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평화구축(Peace Building)방식으로의 전환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것임 더 나아가 '평화의 지속화(sustaining peace)'라는 개념이 도입됨. 평화활동의 임무는 단순히 갈등 세력 사이의 무력충돌을 막는 일이 아니라, 갈등의 요인 자체를 근본적으로 제거하거나 갈등을 평화적인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또는 행정적 기능 회복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것임(황일도, 2017). 이는 사회 전 영역의 역량을 높여서 폭력을 야기하는 요인

들을 진단하고 처방함으로써 평화로운 구조와 관계를 만들어 내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안정화되는 지속가능한 평화를 지향하는 것임. 이는 곧 적극적 평화를 창조하는 활동이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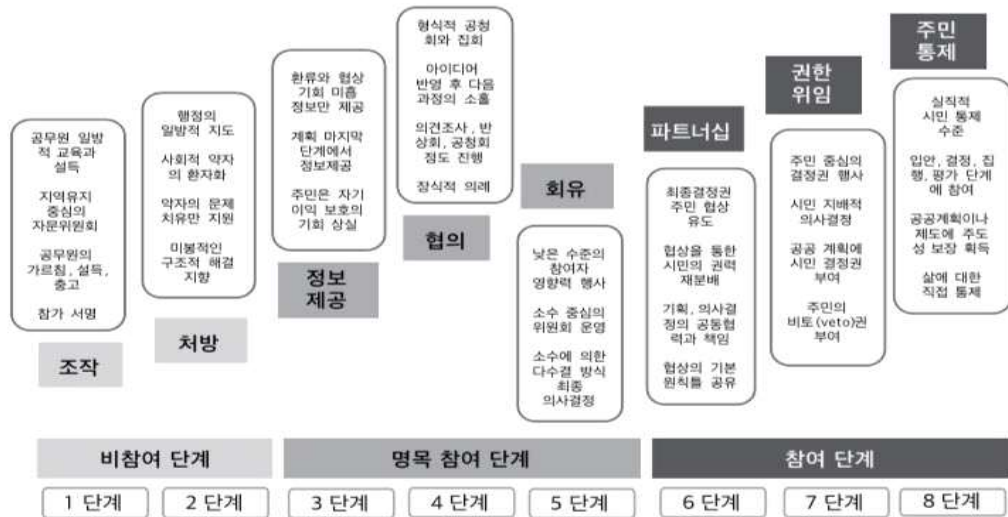
참여·시민참여·여성참여의 의미

- 참여는 사회 구성원이 의사결정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행동(Nagel, 1987)을 말하며 당사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 과정이며 해당 주체의 의견을 통합하는 과정임(Abel & Stephanm 2000).
- 참여는 기본적 시민권으로서 자신의 삶에 영향을 주고 자신이 살고 있는 생활환경에 영향을 주는 의사결정을 공유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음(Hart, 1997). 따라서 참여는 민주적 과정의 필수 요소라고 할 수 있음.
- 또한 시민참여(civic participation)는 공식적, 일상적 활동을 포괄하는 보다 포괄적이고 폭넓은 개념으로 볼 수 있음(Putnam, 2009). 즉, 시민행동주의(civic activism)로 바람직한 활동을 통한 공동체의 기여를 강조함(이선미, 2016).
- 즉, 참여하는 시민은 투표나 관례적 정치참여만을 시민의 의무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에 자신의 직접적인 목소리를 부여하는 활동에 참여하는 시민을 의미함(Dalton, 2009).
- 참여적 시민, 참여하는 청년, 참여하는 여성은 공동체, 삶의 질과 같은 이슈들에 관심을 가지며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중시하고 지역사회 등에 동참하는 것이며(주성수, 2017)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행위를 통해 사회발전을 이루어 나가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음.
- 특히 자율적이고 적극적 참여는 참여의 과정이나 정책결정과정에서 시민의 참여와 영향력에 상호 영향을 주면서 정보와 의사소통이 일방향에서 쌍방향으로 전환되는 소통이 이루어지는 관계적 특성을 갖게 됨(김성균, 김찬수, 2016). 따라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쌍방향의 협력적 관계의 거버넌스를 이루는 것이며 풀뿌리로부터 시작하여 민간영역과 공공영역의 상호이해관계의 수준을 넘어선 긍정적 협력의 관계망을 형성하는 것임.
- 이러한 여성참여에 대해 유엔안전보장이사회 1325 채택 이후 후속 결의문이 채택되었고 평화과정에서의 청년의 참여를 강조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2250이 2015년도에 채택된 이후에 두 개의 결의문이 추가적으로 채택되었음¹⁰⁾.

10) 유엔안전보장이사회 2250 결의문의 경우, 분쟁을 통해 영향을 받는 국가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청년이 항구적인 평화와 화해에 기여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음. 회원국들은 분쟁예방과 해결을 위해 모든 수준에서 청년들의 포괄적인 의사표현을 증가시키는 방법을 고려해야 하며 모든 관련 행위자들은 평화 협상과정과 이행에 있어서 청년들의 참여와 그들의 의견을 고려해야 함을 강조함. 무력 충돌과정에서 청년을 포함한 민간인들의 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국가는 청년을 포함한 모든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해야 함. 또한 폭력예방활동을 시행하고 사회적 결속을 지원하는 적절한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청년이 참여하

- 이후 공식적인 평화과정에서의 여성참여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한 국가 수도 점차 늘어나고 있음. 그러나 청년의 경우, 청년, 평화, 안보에 관한 논의는 거의 부재한 실정임.

시민의 참여사다리



출처: Arnstein(1969); 김성균 외(2016) 재구성.

청소년의 참여사다리

단계	내용	참여정도
8	청소년 주도로 성인과 의사결정을 공유하는 단계	참여 단계
7	청소년이 주도하고 감독하는 단계	
6	성인주도로 청소년과 의사결정을 공유하는 단계	
5	성인들이 정보를 제공하고 청소년과 협의하는 단계	
4	성인들이 지시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단계	비 참여 단계
3	명목상으로 참여하는 단계	
2	동원되는 단계	
1	상징적인 도구로서 이용되는 단계	

출처: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2017).

는 평화, 관용, 문화, 종교 간의 대화를 촉진해야 함. 국가는 정치적 재정적, 기술적, 그리고 물류적인 지원을 확대하며 지역사회와 NGO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폭력적인 극단주의 등에 대항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함. 이러한 재통합의 과정에서 청년의 고용의 기회 확대 등 포괄적 노동정책을 포함하여 무력 충돌에 영향을 받는 젊은이들의 요구를 고려해야 함. 특히 평화의 문화를 증진시키는 관련 교육기회를 확대하여 청년들의 능력과 기술을 통해 구축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함.

평화과정에서의 여성참여

- 참여의 중요성과 쌍방향의 협력적 거버넌스의 중요성에서 더 나아가 어떠한 참여를 이루어 낼 것인가도 중요한 과제 중 하나임. 여성의 참여비율을 높이는 것과 여성의 역할과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 모두가 여성 참여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음.
- 2018년 여성, 평화, 안보에 관한 UN 사무총장 보고서에서는 의미 있는 참여의 개념에 대한 검토가 있었으며 분쟁의 예방, 해결 및 재구축 과정에서의 여성의 의미 있는 참여와 이에 대한 장기적 지속가능성에 대해 논의가 진행되었음(UN Women, 2018).
- 효과적이고 의미 있는 참여는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의미 있는 참여란 여성들 간의 교류, 지속적인 학습과정, 능동적이고 책임감 있는 리더십이 공유되는 과정에서 명목적인 참여 즉, 고립된 관찰자, 연관성이 낮은 자문기구에의 참여, 피상적 참여가 아닌 실질적, 적극적 참여를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함.
- 평화과정에서 여성 시민사회단체의 기여와 핵심적 역할, 강력하고 일관성 있고 유연한 운영자금, 시민사회가 공식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안전하고 공공적인 참여 공간 확보, 여성단체들을 위한 역량 투자 등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의 요소들이 의미 있는 참여를 가능하게 한다고 할 수 있음.
- 특히 여성들이 참여하는 평화과정에는 실질적인 분쟁 해결을 위한 방안에서 성인지적 관점에서 영향력 행사, 의제설정과 연대적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기관. 여성의 요구와 이익을 효과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지식과 자신감 즉, 자기효능, 정보공유, 영향력 공유,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참여와 영향력을 행사하는 실제적인 참여의 정 중앙에 위치하는 것이 바로 의미 있는 참여(meaningful participation)라고 할 수 있음(UN Women, 2018). 이러한 과정에서 여성 시민사회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

평화과정에서의 여성참여 사례

- UN Women(2017)에 따르면 1990년부터 2017년까지의 평화 프로세스 내에서의 여성참여 사례를 살펴본 결과, 여성의 대표적인 참여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남. 평화 협상에서 중재자로서의 역할은 2%였으며 3%가 평화협정문의 서명자였으며 8%가 평화협정의 협상자로 나타남(UN Women, 2018).
- 1990년부터 2017년까지의 1,187개의 평화협정 사례를 분석한 결과, 여성에 대한 언급이 포함된 평화협정은 전체의 19%였으며, 분쟁과 관련한 성폭력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 평화협정은 전체의 5%에 그치고 있음(University of

Edinburgh & the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2018)

- 평화과정에서의 여성참여 사례는 몇 가지로 유형화할 수 있음. 공식적인 평화협상자로서 실질적인 대표성을 가지고 참여한 과테말라와 북아일랜드, 필리핀의 사례, 독립적인 기술자문기구가 설립되어 협정초안에 대한 검토과정을 허용했던 다르프르, 공식적인 프로세스는 존재하지 않았으나 시민사회가 공식적인 협상과정에서의 역할을 지원했던 콜롬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모잠비크,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의 사례, 별도의 대화 프로세스와 지역사회 내의 평화구축을 주도한 타지키스탄의 사례 등이 있음(Inclusive security, 2013). 이중 실질적인 대표성을 가지고 참여했던 북아일랜드, 필리핀의 사례와 최근에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콜롬비아의 사례를 소개하도록 함.
- 북아일랜드는 아일랜드와의 통합을 원하는 가톨릭계 주민들과 영국 영토로 아일랜드가 남아 있기를 원하는 신교도 주민들 간의 유혈분쟁이 지속화되었음. 1996년 항구적인 평화를 위한 희망적인 회담 과정을 운영하고 1998년 성금요일 협정(벨파스트 협정)을 맺음. 여성들은 무엇보다 지역사회의 NGO와 시민사회단체 지도자들이 평화회담 전후에 신뢰와 협력의 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Initiative'92로 불리는 시민조사위원회는 지역사회 주민들이 미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시민참여를 주도하는 역할을 하고 모니터링 활동을 전개함. 학자들 또한 실질적인 문제에 대한 여론조사인 평화여론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공동체가 원하는 합의가 무엇인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함. 정치대화를 위한 포럼을 개최하고 직접적으로 시민사회 등의 여성 지도자들이 회담에 직접 참여하여 협상을 진행함. 또한 국내와 국제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주민 교육활동과 훈련 이벤트 등을 개최함. 피해자들에 대한 인권보호 및 화해 방안, 양심수의 재통합, 교육, 복합주거 문제, 지역사회 개발 등 분쟁 이후의 사회통합 이슈를 구체적으로 제기하고 논의를 이끌어 냄. 이후 여성의 정치참여가 확대되었으며 여성들의 정책 의사결정 과정 내의 참여가 공식화되었음.
- 필리핀은 2014년 방사모로 협정 체결 과정에서 여성이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례임. 필리핀은 분리주의가 극심한 국가 중 하나로 내전으로 인한 사망자가 급증하고 이산가족 및 민간인의 피해가 극심했음. 반군단체인 모로 이슬람 해방전선(MILF)이 필리핀 정부와 방사모로에서의 협정에 서명하였는데 평화협정 과정에서 코로넬 페레가 협상단 대표로 임명되면서 필리핀 정부협상팀을 이끌면서 협상단 중 여성비율을 32%로 확정함. 최종 평화협정 서명자 중 25%였음. 여성단체를 포함한 시민사회단체들의 공식적 평화과정 내의 여러 제안을 제출하면서 참여하였으며 여성이 형식적으로 협상에 참여하면 안 된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주장함. 평화협상 과정의 주요내용을 모니터링하면서 여성들이 소외된 집단이나 피해자의 우선 필요사항을 반영하도록 노력함. 이를 풀뿌리 지역 주민들 즉, 종교와 토착민, 청소년, 그리고 다 단체들에게 까지 지속적으로 알리는 캠페인을 벌였으며 시민들의 의견을 협상과정에 반영하는 역할을 하였음. 2012년 기본 틀

합의 이후에도 폭력사태가 발생하였으나 여성들이 평화시위를 통해 협상이 재개 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마련함(UN Women, 2015). 필리핀 여성들은 전쟁 종식과 평화 구축과정에서 여성이 참여하고 여성이 실제적인 역할을 강화하도록 하는 역량을 구축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성 참여의 장벽이 존재하고 있으며 국가는 여성참여를 할당 정도로 인식하는 한계를 보임.

- 콜롬비아는 아직 UNSCR1325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국가임. 그러나 지역과 시민주도의 평화협정 모델로 최근에 많은 주목을 받고 있음. 콜롬비아는 다양한 국제법 조약의 의무들을 국내의 법들과 일치시키고 있음(Bouvier, 2016). 2011년 11월 회담에서 정부의 기존의 약속과는 달리 20명의 협상대표단 중 1명만이 여성인 것을 알게 되면서 2013년 포괄적 평화프로세스를 요구하는 여성과 평화에 관한 정상회의(National Summit of Women and Peace)를 출범시킴. 이후에 콜롬비아에서 평화프로세스 내에서의 여성 참여의 지형이 변화됨. 또한 콜롬비아에 있는 스웨덴, 노르웨이, 스페인, 스위스 등의 외교 공관들과 Oxfam 등이 참여하여 평화협상이 포괄적 참여과정이 되도록 지원함. 2015년까지 정부 협상팀의 20%, 반군 대표단의 43%가 여성으로 구성되었고 성소수자도 포함됨. 시민사회의 유엔여성기구의 지속적인 협력으로 2014년에 젠더분과위원회가 설립되었고 다양한 여성들이 참여하여 생생한 증언과 다양하고 구체적인 아젠더를 제안하였음. 특히 피해여성들이 평화협상 대표단을 만나서 증언할 수 있도록 함. 이후 여성들이 공식적으로 위원회에 참여하여 평화협상을 벌였으며 정부 내 평화고등판무관실에도 참여하는 등 공식적 과정에 여성들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함. 다양한 시민들이 평화, 빈곤감소, 반부패를 지지하는 ‘해방 프로젝트’를 개발하였고 노동조합, NGO, 기업지도자, 지방 관리들로 부터 광범위한 대표성을 통해 공공의 정보를 배포하는 역할을 함. 이에 토지보상, 사법정의, 피해자 배상 등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포함시킴. 여성과 시민들이 이전의 양극화되고 폭력적인 사회에서 지역사회 화해의 촉매제 역할을 담당함. 또한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를 공개적으로 토론하도록 하면서 폭력 사건을 줄이는 주도적 역할을 하였음. 콜롬비아의 평화협정에는 여성의 권리와 보호, 참여가 매우 세부적으로 포함되어 있음. 반군과 정부군 여성들의 퇴역 후, 전통적인 여성의 역할을 강요받을 수 있음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고 군인들의 퇴역 후의 사회 재통합의 문제, 토지개혁, 사회적 정의 등의 과제가 남아 있으나 매우 적극적으로 평화과정을 이루어 가고 있음.
- 이러한 사례를 통해 여성의 참여가 명목적 참여가 아닌 실질적 참여를 이룰 때 보다 효과적인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여성, 사회적 약자, 사회적 통합, 내적 통합, 지역사회의 화해의 넓은 범위의 의제를 설정하는데 있어서 지역의 뿌뿌리 조직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연결하는 작업의 중요성을 보여줌. 또한 이러한 여성의 참여는 여성들의 일상적 삶의 변화와 더불어 여성 정치참여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노력은 국제적인 시민단체,

유엔기구, 관련 국가들의 협력과 국내적으로는 시민사회, 정부, 학계의 역할분담과 협력을 통해서 가능했음을 알 수 있음.

한반도의 여성참여를 위한 제안

1. 한반도의 평화과정에서의 여성참여를 높이고 주요 의제를 논의하고 발전시키는 공공 거버넌스 모델 개발

- 정부와 NGO가 함께 협치를 이루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나 국제 NGO와 연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함. 정경란(2007)은 여성의 세력화와 평화형성에 필요한 지식을 증대하도록 여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평화관련 시민단체 조직들을 구조적, 사적, 공적 폭력 사이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폭력의 망'을 이해하도록 교육하며 여성의 세력화와 평화형성에 필요한 지식 증대를 위해 여성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함. 또한 갈등과 무력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위한 프로젝트에 대한 재정지원을 늘리고 평화형성 과정에서의 여성의 역할에 대한 인식과 지식을 주류화하고, 평화형성을 위한 접근과 방법론을 개발하는 연구 사업을 지원하고, 교육, 연구, 평화실현 실천 활동에 종사하는 여성 간의 강력한 파트너십을 형성해야 함을 강조하였음. 이는 서로 다른 맥락 속에서 달리 진행되는 활동은 가장 최상의 아이디어와 실천방식을 서로 배울 수 있도록 해줄 것이라고 하였음.
- 이러한 측면을 논의할 수 있는 즉, 평화과정에서 여성(청년)의 의제 발굴을 위한 공공거버넌스 모델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벨기에는 삼각연대(velvet triangle) 모델을 통해서 시민참여를 이루어 냈. 여성주의 정체성을 가진 정책의사결정자, 학자(전문가), 여성단체 대표, 여성, 청년 활동가로 구성된 공동위원회가 평등한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연구와 경험, 제도적 연계망을 구축하는 것임. 이를 통해 여성, 평화, 안보의 의제 발굴 및 공식적인 정책 제안과 법적 제도적 토대 마련이 가능할 수 있음.
- 이와 더불어 여성 참여비율을 증가시키는 전략과 의미 있는 여성참여, 적극적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는 연대체 구성

2. UNSCR1325국가행동계획의 실제적 이행에 대한 모니터링 평가, 지역행동계획으로의 가능성 타진

- UNSCR1325는 참여, 보호, 예방, 구호 및 복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후속결의안들이 채택됨에 따라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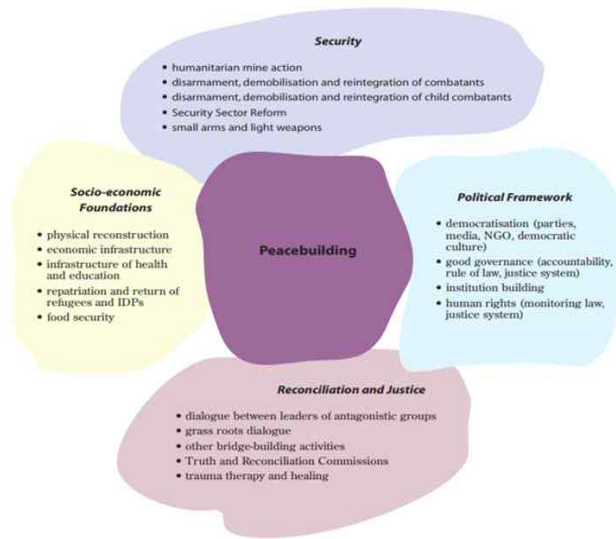
- 이러한 진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채택된 79개국의 국가행동계획 중 34개국(43%)만이 할당된 예산을 포함하고 있음. 또한 24개국(30%)만이 군축에 대한 언급을 포함하고 있으며 비무장화와 소규모 무기불법거래 등을 통제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제공하고 있음. 57개국(72%)는 모니터링 및 평가를 위한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따라서 이러한 측면에서 다양한 여성평화안보의 의제들 간의 연관성에 대한 분석과 평가가 필요한 시점임.
- 국가행동계획의 이행에 대한 양적, 질적 평가와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고 할 수 있음. 국가행동 계획 수립과정에서의 실제적 여성참여를 증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지속적 협의과정 마련해야 함.
- UNSCR1325 이행이 여성들의 삶과 정부부처의 역할, 우리 사회 전반의 변화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impact assessment 진행.
- 또한 아프리카 연합과 유럽연합의 경우 지역행동계획(RAP)도 수립하고 있음. 동북아지역의 국가행동계획에서 얻은 교훈과 모범사례를 나누고 공동의 지역행동계획에 대한 논의도 확장할 필요가 있음.
(<http://peacewomen.org/member-states>).

3. 성평등한 한반도를 위한 주요 의제 발굴 및 제안

- UNDP는 인간안보를 평화와 안보, 경제발전 및 복지, 사회정의, 인권존중, 환경보존, 민주화, 군축, 법치, 협치 등을 포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이들 요소간의 상호 불가분성 및 상호연관성을 강조함(조민, 2001; 임운택, 2004).
- 인간안보의 주요 관심사는 개인과 지역사회임. 그리고 행위자의 범위는 국가라는 틀을 넘어서 확대되고 과거에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분류되지 않았던 조건들을 포함시킴. 인간안보의 성취는 민중의 보호뿐만 아니라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들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정경란, 2013).
- 댄 스미스(2004) 또한 평화의제를 안보(security), 정치(political framework), 경제사회(socio-economic foundations), 그리고 화해와 정의(reconciliation and justice) 부문으로 나누고 각 부문에서 평화구축 역량을 어떻게 제도화해 나갈 것인가를 파악하도록 제안함.¹¹⁾ 안보부문은 무장해제와 군사력 해체 및 재통합, 안보제도개혁, 지뢰제거 등의 기능을 포괄하며, 정치부문은 정당과 미디어, NGO의 민주화 및 민주문화교육; 책임성과 법치, 사법제도를 통한 거버넌스; 제도 구축과 인권증진 등의 역량을 의미함. 사회경제 부문은 물리적 재건과 경제 기반시설, 보건과 교육 인프라, 난민과 국내외 이산가족 문제, 식량안보 등의 역

11) Dan Smith, *Towards a Strategic Framework for Peace building: Getting their Act Together*. (Oslo: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2004), pp. 27~28; Oliver Ramsbotham, Tom Woodhouse, Hugh Miall, *Contemporary Conflict Resolution*. 3rd edition(Cambridge: Polity Press, 2011), p. 229.

량을 가리키며, 마지막으로 화해와 정의 부분은 적대적 집단 지도자들 간의 대화, 풀뿌리 차원의 대화, 기타 중재활동, 진실화해위원회, 트라우마 치유에 관한 활동을 말함. 또한 이러한 네 부문의 활동이 어떻게 조합되어 평화구축의 역량을 강화하는가가 중요하다고 강조함(김병로, 2013). 여성평화운동의 의제 또한 이러한 네 개의 축을 중심으로 생존, 안보, 군사적 갈등뿐만 아니라 경제적 불평등, 환경, 경제 사회환경의 개선, 내적 치유와 통합 등에 대한 각각의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이러한 목소리를 국제사회에 전달할 책무성이 있음.



출처: Dan Smith, Towards a Strategic Framework for Peace building(2004).

- 여성평화운동은 회원활동으로서의 실천과 더불어 여성평화안보에 관한 목소리를 높여 왔음. 군축과 인간의 삶의 질, 인도적 지원, 평화체제 수립과 비핵화, 전쟁의 종식과 핵 없는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과정에서의 민간참여 보장, 남북 사회문화교류 등을 성명과 구체적 실천활동으로 전개해 왔음¹²⁾.

4. 청년 평화, 안보 활동가들과의 연대

- 우리나라 청(소)년 인구는 2019년 현재 876만5천명으로 이중 여성 청소년은 47.7%임. 2018년 초, 중,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청소년의 96.2%는 남자와 여자는 모든 면에서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성평등의식을 가진 것으로 나타남. 특히 여학생(97.8%)이 남학생(94.8%)보다 양성평등 의식이 더 강

12) 5.24 평화와 군축을 위한 세계 여성의 날을 비롯하여 여성, 평화, 안보의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여성들은 남북 간의 신뢰 회복, 군축과 복지, 인도적 지원, 자연재해 등의 공동 위기관리 협력, 평화체제 수립과 비핵화 추진, 평화과정에서의 민간 참여 보장과 남북의 지속가능한 사회문화교류, 이산가족 상봉, 비핵화와 핵없는 한반도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고 실제적인 실천활동을 전개해 왔음. 2019년 1월에는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번영을 위한 여성선언과 2019년 5월에는 대북식량지원에 대한 여성들의 요구를 발표한 바 있음.

한 것으로 나타났고 남학생의 경우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청소년들의 사회적 이슈나 쟁점, 정치문제에 대한 관심수준은 10점 만점에 4.93이며 연령이 높을수록 사회문제에 더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8).

- 유엔안전보장이사회 2250 결의문에서는 분쟁을 통해 영향을 받는 국가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청년이 항구적인 평화와 화해에 기여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음. 회원국들은 분쟁예방과 해결을 위해 모든 수준에서 청년들의 포괄적인 의사표현을 증가시키는 방법을 고려해야 하며 모든 관련 행위자들은 평화 협상과정과 이행에 있어서 청년들의 참여와 그들의 의견을 고려해야 함을 강조함. 무력 충돌과정에서 청년을 포함한 민간인들의 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국가는 청년을 포함한 모든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해야 함. 또한 폭력예방활동을 시행하고 사회적 결속을 지원하는 적절한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청년이 참여하는 평화, 관용, 문화, 종교 간의 대화를 촉진해야 함. 국가는 정치적 재정적, 기술적, 그리고 물류적인 지원을 확대하며 지역사회와 NGO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폭력적인 극단주의 등에 대항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함. 이러한 재통합의 과정에서 청년의 고용의 기회 확대 등 포괄적 노동정책을 포함하여 무력 충돌에 영향을 받는 젊은이들의 욕구를 고려해야 하며 특히 평화의 문화를 증진시키는 관련 교육기회를 확대하여 청년들의 능력과 기술을 통해 구축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이를 위해 참여, 보호, 예방, 재통합, 파트너십을 강조하고 있음.
- 청(소)년들에게 청년, 평화, 안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것은 교육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음. 그리고 기존의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는 청년활동가들의 뛰어난 감수성을 활용한 창의적인 운동과 기존 선배들의 여성평화운동의 경험과 지식이 공유되고 만나는 지점을 마련해야 함.

5. 북한의 인도적 위기 상황에 대한 여성계의 공동대응

- 세계식량농업기구(FAO)의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주민의 43%인 1천90만명이 식량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며 생후 6개월에서 23개월 사이의 어린이의 1/3이 최소 적정 식사량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음. 또한 어린이 5명 중 1명이 만성적인 영양실조에 따른 발육부진에 시달리고 있음(FAO, 2019).
- 2018년 유니세프의 보고서에서도 이미 20만 명의 북한 어린이들이 심각한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고 제재가 강화되면서 인도주의적 지원의 중단으로 인해 생명에 지장을 받을 수 있는 취약한 어린이가 늘어나고 있음(UNICEF, 2018).
- 유엔안보리결의안에 따르면 제재위원회는 인도주의 목적이나 결의안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제재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며 안보리 준수 여부에 따라 결의를 강

화, 수정, 중단, 폐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북한의 식량 위기의 문제 즉, 인도주의와 정치를 분리하고 한국정부가 자율적으로 지원 가능한 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여성들의 일관된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전달할 필요가 있음.

6. 국제 연대의 확장

- 현재 국제적 연대로 진행하고 있는 Korea Peace Now! 캠페인은 2020년은 북경여성행동강령의 25주년, 유엔안보리결의안 1325 20주년, 국제 평화의 문화를 촉진하는 해(International Year for a Culture of Peace) 20주년임. 따라서 여성평화안보의 구체적 아젠더를 개발하고 이를 국제적 관계에서 확장하고자 함.
- 그간 여성단체들은 한국, 중국, 일본과의 연대활동, 한-일 여성들 간의 연대활동, 동북아시아의 연대 활동 등을 진행해 왔음.
- 씨브룩, 바일, 마르코샤임 핵발전소 반대운동 등은 국제연대의 중요성을 보여주었으며 평화과정에서의 여성참여 부분에서도 국내와 국제 연대의 힘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큼.
- 이러한 노력에 이어 2020년까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교육과 조직, 평화과정에서의 여성참여 등의 주창활동을 펼치는 국제 캠페인을 국제연대로 진행하고자 함. 위민크로스디엠지(Women Cross DMZ), 노벨위민스이니셔티브(Nobel Women's Initiative), 평화와자유를위한여성국제연맹(Women's International League for Peace and Freedom, WILPF), 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Korean Women's Movement for Peace)등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한국여성단체연합,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YWCA연합회, 전국여성연대가 핵심단체로 오랫동안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논의해 왔음. 5.24 평화와 군축을 위한 세계여성의 날에 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를 공식 출범하고 여성참여, 여성의제, 교육, 젊은 지도력 개발, 연대, 조직 등의 활동을 공동으로 펼쳐 나갈 예정임. 이러한 연대를 통해 한국 여성평화운동의 역량이 개발되는 방향으로의 연대를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국내외를 연결하는 여성의 목소리를 건강하게 전달하여 동북아시아의 평화체제를 향한 논의의 주체로서 역할을 할 필요가 있음.

7. 평화문화를 형성하는 노력

- 문화는 역사적 구성체로서의 사회 형성과 존재에 필수적이고 다차원적으로 중요함. 인간과 사회의 변화로서의 발전은 문화적 기반 또는 문화적 변화 없이 지속될 수 없음.

- 인간존엄성, 평등, 연대, 평화의 문화, 관용, 인권 등의 원칙들을 존중함으로써 인류의 통합이나 지속가능성을 높여내는 것(UNESCO, 2001)이라고 할 수 있음
- 지속가능한 발전은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요소들이 연결되어질 때 나타남. 지속가능한 발전은 정치적인 변화(민주화와 참여), 경제적인 변화(사회정의, 연대와 환경적 지속가능성 지향), 일상생활의 기본구조 자체들이 문화적 가치들에 깊이 영향을 받음.
- 문화가 우리 사회에 ‘가치 체계’를 제공하고 웰빙, 창의성, 다양성, 그리고 혁신에 기여하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존의 가치에 ‘문화’라는 네 번째 축을 별도로 추가해 문화적 지속가능성의 중요성을 주장하기도 함. 문화적 지속가능성은 다양한 문화 정체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유무형의 문화유산과 문화자산을 보호하고 지역 문화와 지역 지식을 활용하여 문화산업과 문화 다원주의를 확산하는 것임(이태주, 2014). 즉, 문화적 지속가능성은 인간존엄성, 평등, 연대, 평화의 문화, 관용, 인권과 민주주의의 원칙들을 존중함으로써 인류의 통합이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임(UNESCO, 2001).
- 평화형성은 사람들이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추구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모든 심급에서, 즉 개인, 가족, 공동체, 조직, 기업, 정부 간에 그리고 문화적, 종교적, 경제적, 정치적인 제도 간에 ‘관계의 네트워크(networks of relationships)’를 개발하거나 이를 지원하는 것임. 이런 관계망이야말로 권력의 한 형태이거나 사회자본(Social Capital)이 될 수 있는 것임(정현백, 2007). 이러한 관계의 정립과 실천은 남북한의 관계 내에서도 유효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평화프로세스와 여성-대북 제재 해제와 인도적 지원

최수산나 (한국YWCA연합회 중점운동 총괄부장)

1. 대북 제재를 통해 보는 한반도 평화

1) 최근 대북 제재의 현황

- 1993년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선언과 2006년 북한 1차 핵실험 이후, 유엔안보리 결의 1718호에서 대북 제재 세부 항목과 이행 내용을 제시하고 유엔 안보리 15개국 회원국으로 구성된 대북제재위원회를 구성함.

- 이후 2009년 안보리 결의 1874호는 대량살상무기(WMD)와 관련된 무기수출입 금지와 금융 통제를 강화하고, 유엔 회원국들에게 이행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대북 제재 실질적 이행을 감독함.
2013년 북한의 3차 핵실험 강행 후 안보리 결의 2087호와 2094호를 발표하고 북핵 미사일 개발에 전용될 수 있는 대량 현금(bulk cash)의 대북 이전을 금지함. 수출금지 대상이 아닌 품목이라도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이용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출,판매,이전을 전면 통제하는 캐치올(catch all) 방식을 도입함. 북한의 추가 도발시 자동적으로 중대 조치를 표명하는 트리거(trigger) 조항을 규정하고 항공 운항 제재조치도 추가함.
2016년 북한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북제재 대폭 강화하는 2270호를 만장일치로 채택. 석탄,철광석 등 광물 수출 금지 조치 포함 등으로, 유엔 역사상 비군사적 조치로 가장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 결의로 평가됨.

- 2016년 5차 핵실험 후 채택된 유엔결의 2321호는 민생목적이라는 예외규정 악용을 방지하고 대북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석탄수출 제재를 대폭 강화하고 선박,헬리콥터 판매 금지, 아프리카에 판매해온 대형조형물 수출을 금지함. 북한 공관 규모 감축, 북한재외공관 및 외교관의 은행계좌 1개로 제한, 북한 금융 기관의 신규 계좌 개설 금지 등을 추가함.
2321호의 위반 여부 판정 주체는 1718대북제재위원회임. 대북제재조치의 예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인도적 목적이어야 하고, 안보리 결의 목적 달성에 방해되지

않아야 하며, 개별적 사안에 대해,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함. 민생목적의 경우 허용된다는 기존의 예외조항을 삭제함.

2017년 9월 6차 핵실험 후 결의된 2375호는 유류 공급의 30%를 감축하고 북한의 수출품인 섬유 수출 금지, 북한과의 합작사업 및 유지·운영도 전면 금지, 해외파견 북한 노동자의 유엔 승인 없이는 신규고용 금지 등을 추가했음.

○ 미국의 대북 제재는, 미국인, 미국산 제품, 제3국을 대상으로 하는 ‘세컨더리 제재’를 포함하여 미국의 사법적 관할 하의 제재 대상이 되며, 직간접적 대북 수출, 투자, 북한산의 포함된 모든 제품의 수입, 북한 여행 등의 전면 금지하고 있음.

○ 대북제재는 2006년부터 시작되었지만 2015년까지는 무기, 군수물자, 사치품 등의 부분적 제한으로 북한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 2016년 일반 수출입과 금융, 화물 검색 등 범위가 넓어졌지만 민생 예외 조항과 연간 허용한도 조항으로 유지될 수 있었음. 그러나, 2017년 이후 북한의 수출 대부분이 금지되고, 합작 사업 금지, 자동차, 기계 금속 등의 수입 금지가 추가되면서 타격이 가시화됨. 북한의 외화보유액 여부가 추후 국가 경제를 유지하는 데에 관건일 될 것으로 보임. 최고의 압박인 대북 제재는 인도적 지원의 급감과 국제사회·기구들의 북한에 대한 부정적 태도로 이어지며 경제난으로 나타남.

미국의 대북제재는 인도지원 활동을 가능케 하는 여러 개의 중첩되는 라이선스와 면제 과정을 둠. 최근 강화되어온 각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안도 인도지원 사업을 저해하지 않을 것을 명문화하고 있음. 그러나 면제 신청을 위해서는 유엔 회원국이 나 국제기구가 직접 1718위원회에 신청해야 하는 절차를 갖고 있어서 시간의 지연 및 보류·불허의 가능성을 안고 있음.

○ 비핵화 이후 미국 및 국제사회가 제공할 안전보장 조치의 이행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대북 안보리 제재 해제 논의가 필요함. 무엇보다 인도적 차원 또는 민생목적용 거래, 남북교류 협력 사업에 관한 제재는 해제되어야 함.

2) 복합적 위기 상황의 북한 사회

○ 북한은 경제적 악화, 식량난 및 에너지난 등으로 사회 기본인프라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한 채, 복합적인 위기상황(complex emergency)에 처해 있음.

유엔인도지원국(UNOCHA)이 2017년 발행한 <기억해야 할 잊혀진 위기지역 12곳>

에 따르면, 북한 주민의 60%는 여전히 식량 부족을 겪고 있고 전체 인구의 25%가 필수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해 영유아를 포함한 170만 명의 어린이가 치명적 질병에 걸릴 위험에 처해 있음.

- 2018 세계영양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영양실조에 따른 빈혈, 발육부진의 심각한 문제를 겪는 26개 국가 목록에 포함되어 있으며, 북한 가임기 여성의 빈혈 유병률은 31.2%임. 북한은 결핵으로 인한 국가 부담이 큰 국가로, 지난 20여 년 동안 WHO, 글로벌 펀드(Global Fund), 민간단체 등에서 지속적인 결핵 지원 사업을 전개하였음에도 2010년 이후 결핵 발생률이 증가함. 체계적으로 치료 받지 못한 환자 수가 세계최고 수준으로 나타남.

2019년 유엔 북한팀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아동 5명 중 1명(19%)이 만성영양실조이며, 양강도는 32%, 평양시 10%로 지역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남. 여아들의 발육부진 비율(19.9%)은 남아의 발육부진 비율(18.4)보다 높음. 5세 미만유아 중 약 3%(약 140,000명)는 급성영양실조를 앓고 있으며, 주원인은 열악한 가정 내 식이 환경, 부족한 섭취와 양육 그리고 물과 위생 관련 서비스에 대한 접근 부족으로 나타남. 지금도 북한에서는 여전히 영양결핍으로 설사병 등 예방 가능한 요인으로 인한 영유아 사망이 초래되고 있는 상황임.

- 세계인구현황보고서는, 북한의 모성 사망률은 2008년 10만 명 당 77.2명에서 2017년 82명으로 높아진 수치를 보여주고 있음. 모성 사망의 원인은 산후 출혈이 49%, 분만에 의한 패혈증과 감염 사망이 15%, 임신성 고혈압이 13%임. 1990년대 중후반 고난의 행군 시기 전후에 태어난 아동기와 청소년기를 보낸 여성들은 발육과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보임. 영유아기의 영양결핍은 장기적으로 신체장기 기능에 영향을 미쳐 성인이 되면 만성질환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영유아기 영양공급의 중요성에 대해 주목해야 함.

- 2018년 식량 생산량은 전년 대비 50만 톤 감소한 495만 톤으로 최근 10년간의 기록을 비교해볼 때 최악의 상황임. 이는 경지 부족, 낙후된 농기계와 비료, 그리고 반복되는 자연재해에 기인함, 2018년 7-8월 동안에는 북한의 '곡창지대'로 여겨지는 지역에서 평균 기온보다 11도 이상 높은 폭염이 발생함. 이에 더해 만성적 인도적 위기를 가중시킨 사건은 8월 말에 발생한 태풍 솔릭으로, 함경남도와 강원도의 폭우와 함경남북도 일대에 갑작스러운 홍수가 발생함. 2019년 국제 인도주의 기구들은 인구의 43%인 1,090만 명은 인도주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임을 보고하고, 1억

2천만 달러를 유엔에 긴급 요청함.

- 북한에서 무상 식량배급이 축소되고 무상 치료제에서 보건의료 서비스가 시장화 하면서 경제력에 따른 영양결핍이나 의료 소외계층이 양산되고 있음. 지역적으로는 특히 곡식작물재배에 부적절한 북한 동북부 산간 지역과 안전한 식수가 확보되지 못한 산어촌 등이 심각함. 이들 지역의 임산부와 영유아, 결핵환자, 노인 등은 핵심 인도적 지원 계층임.
- 한반도 평화 공동체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남북의 차이를 파악하여 북한 주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평화적 통합을 위한 필수적인 조건 마련과 남북 간 이질감을 조기 극복함으로써 남북 간 갈등 해소와 통합을 이루어가야 함.

3) 인도적 지원과 국제 사회

- 대북인도적 지원사업은 1995년 7월 북한의 대규모 수해 피해 당시, 북한이 유엔 인도지원국(UNOCHA) 등 국제 사회에 지원을 요청하며 전환점을 맞이함. 당시 세계식량계획(WHO), 식량농업기구(FAO), 유엔개발계획(UNDP), 유엔아동기금(UNICEF) 등의 공동현지조사를 통해 ‘공동지원호소’ 발표와 국제적 지원이 이뤄졌고, 고난의 행군 시기에 식량난 극복에 기여한 바 있음.
2018년 말 현재 세계식량계획, 세계보건기구, 유엔개발계획, 유엔인구기금, 유엔아동기금 등 5개의 국제기구들과 스위스개발협력기구, 유럽연합인도지원국, 이탈리아 외무부개발협력사무소 등 3개의 정부 기구만이 북한에 상주사무소를 설치하고 있음.
- 2019년 발표한 UNOCHA 통계자료 분석 결과, 최근 국제사회의 대북 인도적 지원은 1억9,000만 달러 수준이며, 연도별로는 2016년 약 4,310만 달러, 2017년 약 3,940만 달러, 2018년 3,300만 달러로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고, 주요 지원국은 스위스, 스웨덴, 독일, 캐나다, 프랑스 등 17개 국가임.
올 4월말 UNOCHA 재정추적서비스에 따르면, 2019년 각국 정부와 단체 등이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해 약속한 금액은 지금까지 총1천45만 달러임.
국가별 지원액을 보면, 러시아가 전체 지원액의 400만 달러(38.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스위스가 282만 달러(27.0%), 스웨덴 244만 달러(23.4%), 캐나다 57만 달러(5.5%), 독일 36만 달러, 아일랜드 11만 달러 등임.

주요 대북 인도적 지원 유형은 건강지원(산모, 영유아 등), 영양지원, 긴급식량지원, 수질위생지원 등으로 구분됨. 올해 지원액의 용도는, 식량지원(32.9%), 물 위생(13.8%), 조기 복구(10.2%) 등에 쓰이고 있음.

- 국제사회 대북지원은 북한의 식량 위기 완화에 중요한 역할을 했음. 2008년 이후부터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가 중단되면서 국제 사회 지원이 급감 추세를 보였고, 유엔의 강력한 제재에 북한의 상황은 더욱 어려워졌음. 북한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조차도 유엔 제재로 북한과 교역의 물품과 규모를 크게 제한함. 중국 세관의 통계에 의하면, 2018년 3분기까지 중국과 북한 간의 교역 규모는 전년도에 비해 59.2%로 급감하였고, 대중국 수입은 40%, 수출은 90%가 줄었음. 제재가 완화되지 않는 한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과 인도주의 문제는 해결되기 어려움.

4) 대북 제재 해제와 평화프로세스

- 북한의 인도적 지원은 긴급한 식량의 일시적 지원에 한정되지 않음. 낙후된 농기구와 비료, 관개시설 및 저장시설 농지도로 등 생산기반 시설 확충을 지원하여 식량 생산량을 높임으로써, 만성적으로 발생하는 식량 위기를 극복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임. 이를 위해서는 유엔 제재 완화가 수반되어야 함.
-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조사(2019.3월초)는, 조사대상의 61.3%가 제재 완화를 원하고 있다는 결과를 보여줌(비핵화 조치에 따른 상응조치 차원에서 단계별 대북 제재 완화 42.2%, 대북제재 완화 조치 통해 비핵화를 이끌어 내야 19.1%). 인도적 대북 지원은 탈정치화되어야함. 대북 지원 사업은 국제 사회의 제재 조치 등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 부침이 많음. 북한의 모성과 영유아, 그리고 아동의 건강 및 보건 의료 사업은 정치적인 상황과는 별개로 인도적 원칙에 기초해 국제기구와 한국 정부, 민간단체가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통합 기구 마련을 통해 실질적 성과를 볼 수 있음.
- 대북 제재 해제는 한반도 평화 체제를 선순환적으로 촉진함. 국내적으로는 제재 해제를 위한 시민들의 여론 형성, 민간단체들의 통일부 제안, 국제적으로는 1718위원회 제안, '4.27 민(民)+평화손잡기'와 같은 국내 평화 구축의 노력의 국제적 홍보, 평화협정 캠페인 등을 통해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어내고 움직이는 추동이 요구됨.

2. 한반도 평화적 통합을 위한 여성평화운동의 지향

1) 평화에 대한 대중적 인식 확산

- 한국YWCA는 1980년대 평화통일운동을 시작하여, 북한의 급격한 식량난으로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었던 90년대 중반에 이르러 본격적으로 북한 식량 지원 운동을 시작함. 1996년 ‘어머니의 마음을 북한 어린이에게’ 전국 캠페인을 통해 대대적 모금을 벌이고 25톤의 분유를 보내기 시작하면서 매년 분유를 비롯한 쌀국수, 내복, 학용품 등 다양한 품목을 지원해 옴.

YWCA 북한어린이돕기 운동은 2011년 ‘내 식비의 10분의 1을 북한어린이와 함께’를 캐치 프레이즈로 정함. 이는 기독교적 가치인 사회적 십일조 운동으로서 사회적 약자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공평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어려운 이웃을 위해 십시일반으로 쌀을 나누었던 교회의 성미(誠米)제도와의 일맥상통함. 각 지역의 협력교회, 어린이집, 회원YWCA와 더불어 진행되어왔음. 5월 가정의 달과 11월 감사의 달에 집중적으로 진행되는 이 운동은 북한어린이도 우리의 아이들이라는 생각의 나눔과 더불어, 생활 속 나눔의 정신을 어릴 때부터 갖게 하고, 모금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라는 측면에서 평화적 통합의 의미를 지님.

- 기업 후원이나 정부 기금의 확보보다 시간과 노력의 품을 많이 요구하는 개인 모금운동을 진행하는 데에는, 성별, 연령, 정치적 성향을 넘어서 일반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한반도 평화 공동체를 향한 대중적 기반을 확산하고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함.

- ‘YWCA 길위의평화학교’는 남·북(탈북민)여성들이 대화모임과 문화기행 등을 통해 상호 이해를 높이고 동반자적 관계를 세워나가기 위해 2013년부터 진행된 프로그램으로, 우리 사회 평화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것임. 창립 100주년 기념행사로, 창립 95주년인 2017년부터 100주년인 2022년까지 6년에 걸쳐 ‘YWCA 여성순례: 한라에서 백두까지’를 진행함. 이는 1994년 처음 시작한 ‘YWCA 한민족여성대회’의 맥을 잇는 것으로, 동북아시아의 평화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되는 ‘길위의 평화 포럼’과 ‘평화 순례 등정’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음. 평화 인식을 확산하고 평화운동의 협력 방안과 구체적인 실천 방안 논의를 통해 그 지평을 넓히는 것이 중요함.

- 평화 공동체 형성에 참여하는 시민사회의 뿌리를 세워나가는 일, 평화 체제 구축의 추동력을 내부에서부터 키워나가는 일, 평화의 구심력 강화를 통해 분리주의와 갈등 세력이라는 원심력을 제압하는 것이 가능할 것.

2) 인도주의 기반의 평화 공동체

- 최근 북측의 인도적 지원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약화된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경제적 성장의 한 면에도 불구하고 취약 계층의 인도적 지원이 요구되는 북한 사회의 모순된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 「유엔전략계획 2017-2021」 문서에서 북한 내 사업 목표를 “북한 주민들, 특히 취약계층의 복리 증진을 위한 북한 당국의 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음.

문서에 참여한 유엔 북한팀(14개 기구)과 북한 당국은 4가지 전략 우선순위로, ① 식량 및 영양안보, ② 사회개발 서비스, ③ 재해 및 기후변화 등에 대한 복원력과 지속가능성, ④ 데이터 및 개발관리를 제시하고 있음.

그 첫 번째 전략인 ‘식량 및 영양 안보’의 성과목표는, ‘농업, 원예, 어업, 축산 부문에서 식량생산, 생산성, 가공의 지속가능성’, ‘모든 가계가 언제나 충분하고 다양한 식품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들, 특히 가장 취약한 집단들의 삶의 질 제고’, ‘가임기 여성, 5세 미만 아동, 노인 및 기타 취약 계층의 영양상태 개선’을 내용으로 삼고 있음.

유엔전략계획의 목표와 내용은 북한에 대한 국제제재와 관련 정책들이 한동안 지속될 것을 감안하여 구성되었음. 2016년 3월 통과된 유엔결의안 2270의 48항은 북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국제기구의 활동은 제재대상에서 제외됨을 명시하고 있음. 본 전략계획은 본 문건에서 제시된 정책과 우선순위들이 북한 주민들의 삶에 실질적 변화를 불러온다는 신념 하에서 북한에서의 인도지원 및 개발사업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작성되었음.

- 북한 주민의 영양과 건강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식량 공급량을 증가하는 것이 급선무임. 이는 유엔의 첫 번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인 ‘빈곤 퇴치’, 두 번째 목표인 ‘기아 종식’, 세 번째 목표인 ‘건강한 삶’에 부합함. 따라서 SDGs의 핵심목표인 절대 빈곤 퇴치와 기아 종식, 그리고 경제 제재 해제 이전에 인도적 지원 등이 재개 확대되어야 함. 이는 남측 민간단체들의 대북 지원

방향 정립에도 중요한 나침반이 될 것이며, 이를 위한 유엔 기구와 국내 민간단체의 협력 및 남한 정부의 지원 등이 필요함.

- 문재인 대통령은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에서 '평화협력과 경제협력 공동체로서 신한반도 체제'를 천명함. 평화협력 공동체는 한미 공조와 북미 대화의 타결 그리고 국제 사회의 지지를 바탕으로 비핵화를 달성하는 것이고, 경제협력 공동체는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남북경제공동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남북 모두가 경제적 혜택을 누리는 것을 의미함. 신한반도 체제는 실제적인 식량난이 해결되지 않는 한 불가능하며, 평화와 경제 협력의 의미는 무색함.

3) 성 인지적 관점과 주체적 역량 강화

- 남북 여성 모두 공히 사회적 활동 참여 비율에 비해 의사 결정 과정 참여율은 현저히 낮은 수치를 보임. 세계경제포럼(WEP, 2018)이 밝힌 바에 의하면, 남한 여성의 성 격차 지수는 149개국 중 115위임. 또한 남한 여성의 국회 의원 비율은 17.0%임. 북한은 1946년 북조선 남녀평등에 대한 법령 선포 및 토지개혁으로 몰수한 토지를 여성에게도 무상으로 분배하고, 혁명적 여성상을 강조해옴. 2001년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에 가입하고(남한은 1984년 가입), 2010년 '조선인민주의인민공화국 녀성권리보장법'을 제정 발표하기도 함. 그러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비율도 16.3%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며, 북한 여성의 실제적 지위는 보장되지 않고 있음.
- 평화 체제의 한반도에서 남북 여성의 사회 정치적 지위는 중요한 이슈가 될 것임. 이를 위한 준비 과정으로서 공적 영역에서의 여성의 대표성 보장, 유엔안보리결의1325에 의한 성 인지적 관점에서의 여성·평화·안보에 참여, 그리고 무엇보다 취약 계층에 놓인 여성들의 빈곤화 방지와 노동권 확보를 통해 젊은 여성들의 인권 증진과 리더십 증진에 기여해야 함. 더불어 통일 한국 시대에서 남북 여성들의 가정과 노동 시장에서의 역할, 돌봄 노동의 수행, 성 평등한 사회의 모습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공동의 의제를 개발하여 추진 가능함.

4) '평화의 축(axis of peace)': 새로운 관계의 안정화

① 다자적 접근으로서의 시민사회와 여성들의 참여

- 한미 및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기존의 탑다운 방식의 한계를 드러내었음. 민간 부

문의 역할과 자율적 참여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약화됨. 남북관계의 미래 전망과 관계 개선의 프로세스 구상단계에서 아래로부터의 접촉이 갖는 중요성이 재확인되어야 함. 미국이나 북한 모두 ‘스텝 바이 스텝’, ‘바텀업’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음. 정치군사적 합의나 평화협정체결이 남북한 주민들 간의 일상적 평화와 상호 신뢰를 담보하는 것은 아님.

- 지속가능한 지원과 교류협력을 위해서는 민간 분야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함. 정권의 변화에 쉽게 민간단체들이 휩쓸리며 예측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은 민간의 상호 신뢰 구축을 어렵게 함. 남북의 민간 공동협력기구 형성, 다양한 층에서의 남북여성의 협력, 또한 민간 차원의 협력은 남북 관계의 지속성을 높이고 통일 준비를 위한 상호 역량 강화에도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임. 비가역적이고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를 확보하기 위해 사회 전체 구성원들의 다자적 접근을 통한 민간 교류가 확대되고 통합을 위한 기회가 제공되어야 함. 화해와 연대라는 의미는 함께 걷는 것을 의미하고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안착해나가는 과정을 의미함.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는 남북 사회의 구성원들이 평화를 내면화함으로써 이루어가는 과제임.

② 사회문화 및 지식의 교류

- 남북정상회담을 통한 판문점 선언(2018.4)은 비경제적 협력사업에 대한 강조를 보여주고 있음. 남북관계 개선을 다룬 제1조 3항은 ‘민간교류와 협력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지역에 설치’함을 밝히고 있음. 제1조 4항은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계각층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을 활성화’한다는 내용으로서, ‘6.15를 비롯하여 남과 북에 다 같이 의의가 있는 날들을 계기로 당국과 국회, 정당,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가하는 민족공동행사를 적극 추진’함과, ‘2018년 아시아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 공동으로 진출’함, 그리고 ‘분단으로 인한 인도적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남북 적십자회담을 개최, 이산가족 친척상봉을 비롯한 제반 문제들을 협의 해결’하고, ‘8.15를 계기로 이산가족 친척 상봉을 진행’한다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에서 남북 관계의 개선을 위한 관심과 실천력, 지속가능한 계획과 구상이 필요하며, 공적 기구와 더불어 민간 영역의 기획과 동력의 동반이 요구됨.

- 또한 지식 교류를 통한 상호 이해와 차세대 동질성 강화 프로그램의 기획이 필요함. 캐나다 UBC 대학의 캐나다-북한 지식교류프로그램(KPP, Knowledge Partnership Program)은 캐-북 방문교수 프로그램, 국제회의, 해외 현장 학습 등을 내용으로 함. UBC로 선발 초청된 매년 6명의 교수들은 6개월간 수업에 참여하고, 북한에 돌아가 지식 활용에 대한 토론회를 함. 비정치적인 학술교류는 협력 관계 구축과 지속가능한 사회변화 촉진제라는 것을 보여준 좋은 사례가 됨. 내년 5.24 평화와 균축을 위한 세계 여성의 날 남북여성공동포럼을 공동 개최를 기획하는 것도 사회분야에서 지식 교류의 일환이 될 수 있을 것임. 끝.

부록



1.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번영을 위한 여성선언
(한글, 영문)
2.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국제사회에 보내는 한국
시민사회단체 호소문
3. 성명서: 대북식량지원에 대한 여성들의 요구
(한글, 영문)
3. 한반도 전쟁종식과 평화를 위한 여성행동
Korea Peace Now Campaign 발족 기념 공동성명
4. #Korea Peace Now Fact Sheet
 - 한국에 평화가 필요한 5가지 이유
 - 미국과 북한의 관계 역사
 - 북한에 대한 제재의 인도적 영향
 - 왜 여성이 한국의 평화를 만드는 일에 중심이 되어야 하는가?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번영을 위한 여성선언

2019년 새해를 맞이하였다. 2018년은 4.27 판문점선언에서 남북정상이 함께 선언했듯이 ‘한반도에서 역사적 전환’, 즉 평화가 도래한 한 해였다. 양 정상은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라며 한국전쟁의 실질적 종전(終戰)을 선언하였다. 분단극복과 평화를 위해 노력해온 남북의 여성들에게 ‘판문점선언’과, 북미정상회담, 그리고 ‘9월 평양공동선언’은 한반도 평화번영과 통일의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가져다주었다. 2018년 한반도에서 새롭게 시작된 평화는 2019년에 그 실질적 성과를 거둬야 한다. 한반도에서 지속가능한 평화를 염원하는 여성들은 아래와 같이 선언한다.

1. 한반도 평화과정은 여성들의 목소리와 관심사를 반영하는 민주적 참여를 통해 지속가능한 평화와 통일로 완성되어야 한다. 한반도 분단에서 여성들은 커다란 고통과 희생을 감당해야만 했다. 우리는 여성들이 한반도 평화과정에 참여할 때에 지속가능한 평화가 이뤄질 것이라 믿는다. 이는 2000년 10월 31일 유엔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한 ‘여성, 평화, 안보에 관한 유엔안보리결의안 1325호’에서도 천명된 내용이며, 유엔안보리결의 1325호 대한민국 제2기 국가행동계획에서 평화.통일 분야의 여성참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 것과 상응한다.

2. 남북여성교류의 정례화와 남북여성협력을 통해 남북여성들의 실질적 삶의 질이 개선되어야 한다. 판문점선언에서 남북의 양 정상은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계각층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을 활성화”하기로 약속하였다. 남북여성들은 여성들의 화해와 협력을 위해 다양하게 교류하고 접촉해야만 한다. 남북여성들이 교류와 협력을 통해 여성들의 실질적 삶의 조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남북 정부는 적극 지지하고 지원해야만 한다.

3. 평화번영의 남북관계의 발전을 저해하는 대북제재는 신속히 해제되어야 한다. 유엔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균형 있는 민족경제의 발전을 지향하는 남북관계의 개선과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한반도의 평화번영을 위한 남북의 협력이 유엔과 국제사회의 제재에 걸려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면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도 지체될 수밖에 없으며, 아울러 평화번영의 주인이 되어야 한 남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남북관계의 발전을 저해하고 인도적 위기까지 초래하는 대북제재는 신속히 해제되어야만 한다.

여성들은 2월말로 다가온 제 2차 북미정상회담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로 나아가기 위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바란다. 아울러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양 정상이 약속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답방도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짐으로써 한반도 평화과정이 더욱 단단한 길로 나아가길 바란다. 2019년 2월 12일, 13일 이틀간 금강산에서 열리는 남북공동 새해맞이행사에서 남북여성들은 이 땅의 평화의 미래를 만들어 가기 위해 여성교류의 공동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남북의 여성들은 한반도 평화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이 땅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이끄는 역사의 주체가 될 것이다.

2019년 1월 28일 여성단체와 개인 일동(가나다순)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여성본부 고양파주여성민우회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경남지부

(주)질경이우리웃 '라온'평생교육원 강릉여성의전화 강화여성의전화 거제여성회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자주여성연대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연대 경남여성장애인연대 경남여성장애인연대 경남여성회 경남여성회 경남이주여성인권센터 경산여성회 경주여성노동자회 경주여성노동자회 고양여성회 고양파주여성민우회고양파주여성민우회 관악여성회 광명여성의전화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 광주여성센터 광주여성의전화 광주여성의전화 부설 성매매지원 센터 '한울지기', 사단법인대구여성인권센터, 여성인권티움, 새움터,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부설 성매매피해상담소 언니네 / 센터 푸른꿈터, 인권희망센터 '강강술래',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제주여성인권연대 부설 상담소 해냄 / 센터 불턱 / 자활지원센터, 수원여성의전화 부설 어깨동무 상담소,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 부설 여성여성자활센터 / 무지개 센터, 경남여성회 부설 여성인권상담소, 목포여성인권지원센터 광주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광주여성장애인연대 광주여성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구로샅터지역자활센터 구로여성새로일하기센터 구로여성인력개발센터 구로여성회 구리여성회 군산여성의전화 군포여성민우회 기독교여성상담소 기독교여성회 김포여성의전화 김해여성의전화 김해여성회 남부여성발전센터 남양주여성회 남해여성회 다울교육문화센터 다함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북구여성회 대구여성광장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인권센터 대구여성장애인보호작업장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여성장애인통합상담소 대구여성회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대전여민회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대전여성장애인자립지원센터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대전여신학자협의회 대전평화여성회 동두천새움터 등불야학 마산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목포여성의전화 목포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민중당여성엄마당 부산교육문화센터 부산동래여성인력개발센터 부산북구지역자활센터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사회교육원 부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 부산여성의전화 부산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센터 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산여성회 부산이주여성인권센터 부산한부모가족센터 부천나눔지역자활센터 부천여성노동자회 부천여성의전화 부천여성회 분당여성회 사단법인젠더 사천여성회 살림 새움터 서귀포여성회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 서울남서여성민우회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서울시 직장맘 지원센터 서울여성노동자회 서울여성연대(준) 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서울이주여성센터 성남여성의전화 성남여성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 수원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의전화 수원여성회 수원일하는여성회 순천여성장애인연대 시흥여성의전화 실천여성회 '판' 아자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안산양지지역자활센터 안산여성노동자회 안성여성회 안양나눔여성회 안양여성의전화 양산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여성인권 티움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 열림터 영광여성의전화 오산여성회 용인여성회 울산여성의전화 울산여성회 울산한부모 가족자립센터 원주여성민우회 의정부두레여성회 이천여성회 익산여성의전화 인천부평지역자활센터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민우회 인천여성의전화 전국여성노동조합 전북지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청소년행동연대날다 전남여성장애인연대 전남여성장애인연대 전남여성장애인연대 전남이주여성인권센터 전북여성노동자회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연구회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전북여성장애인연대 전북이주여성센터 전북이주여성인권센터 전주시 직장맘 고충상담소 전주여성의전화 정의기억연대 정의당여성위원회 제주여성민우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여성회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주부아카데미협의회 직업재활팀 진주여성민우회 진주여성회 진해여성의전화 진해여성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창원여성살림공동체 창원여성의전화 창원여성회 천안여성의전화 천안여성회 천주교복자수녀회여명의집 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청각장애인여성회 청주여성의전화 청주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춘천여성민우회 충남여성장애인연대 충북여성장애인연대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통영여성장애인연대 통영여성장애인연대 종합지원센터 평택새움터 평택여성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풀뿌리여성 '마을숲' 하남여성회 한국YWCA연합회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교회연합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노동자회(중앙)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한부모연합 함께하는주부모임 함안여성회 해돋이 자립생활센터 햇순여성상담

강경란 강경애 강귀전 강근정 강남순 강다복 강명숙 강문신 강문영 강미경 강미라 강선희 강성숙 강순영
 강순지 강순희 강신숙 강연주 강연희 강영주 강영진 강영희 강예순 강옥남 강옥희 강은미 강은정 강인영
 강인희 강임숙 강정남 강정연 강정희 강진숙 강진희 강현미 강혜숙 강혜정 강효경 강희정 고갑연 고경희
 고미경 고미라 고민정 고민희 고승희 고아라 고애숙 고윤희 고은선 고은영 공정아 곽미숙 곽은하 곽희정
 구미숙 구순례 구영애 구자영 구점숙 구정화 구학선 국일선 권경애 권기영 권내영 권말선 권명순 권순정
 권정애 권정화 권향숙 권현숙 기희진 김가영 김경순 김경순 김경애 김경혜 김경화 김경희 김경희2 김광
 남 김귀옥 김근아 김금숙 김금희 김기명 김기연 김기연 김나영 김남영 김남희 김누리 김다운 김다정 김
 달애 김대연 김도남 김동희 김두필 김말숙 김맹순 김명미 김명숙 김명순 김명희 김미경 김미라 김미랑
 김미령 김미선 김미성 김미숙 김미순 김미영 김미지 김미정 김미현 김민문정 김민서 김민임 김민정 김박
 은주 김방희 김복희 김봉선 김분경 김상옥 김상희 김선님 김선님 김선미 김선양 김선영 김선일 김선정
 김선주 김선화 김선희 김성애 김성연 김성옥 김성은 김성자 김성희 김소희 김수경 김수림 김수연 김수영
 김수정 김숙자 김숙정 김숙희 김순심 김순애 김순옥 김순희 김승숙 김애영 김애자 김양순 김연경 김연주
 김연화 김영경 김영남 김영란 김영림 김영미 김영숙 김영순 김영신 김영아 김영희 김오례 김오목 김옥련
 김옥순 김옥양 김옥임 김완숙 김용숙 김용자 김원숙 김원은 김원일 김윤미 김윤주 김율리 김은경 김은경
 김은규 김은선 김은숙 김은영 김은정 김은주 김윤자 김은혜 김은희 김인숙 김재민 김점석 김정미 김정수
 김정숙 김정순 김정은 김정은 김정은 김정은 김정은 김정은 김정은 김정은 김정은 김정은 김정은 김정은
 김주희 김지애 김지영 김지은 김지현 김진숙 김진옥 김진주 김진희 김천 김태희 김필옥 김하나 김하린
 김한영 김해영 김해정 김현숙 김현정 김현희 김형미 김형자 김혜란 김혜선 김혜숙 김혜원 김희경 김화무
 김황경산 김효정 김효주 김후관 김후연 김희미 김희련 김희정 김희진 나영숙 나운림 남광현 남명선 남성
 희 남수정 남은주 남임 노선미 노연희 노영란 노정화 노주연 노주희 노혜진 도이정 도지우 도향주 류경
 민 류명화 류명희 류미연 류부영 류은숙 류혜경 류호정 목유경 문경희 문규옥 문난희 문영란 문영미 문
 영선 문정숙 문정순 문지애 문현숙 민경아 민미례 민소현 민지완 박가영 박경자 박근영 박근희 박기순
 박노숙 박남희 박명희 박문옥 박미경 박미라 박미란 박미선 박미숙 박미순 박미영 박미정 박민선 박민정
 박복실 박봉정숙 박상은 박선미 박선영 박선의 박선희 박성애 박소연 박소영 박송이 박수경 박순경 박순
 덕 박순애 박순옥 박시내 박신양 박신희 박연주 박영애 박오숙 박옥분 박옥선 박유희 박유희 박유희 박
 은경 박은경 박은주 박은하 박은희 박은희 박은희 박인경 박인숙 박인혜 박점옥 박정숙 박정애 박정희
 박주미 박주영 박주현 박주희 박지아 박지영 박지현 박향미 박현경 박현선 박현아 박현정 박현주 박혜경
 박혜명 박혜숙 박혜정 방은미 배경숙 배명자 배성숙 배수정 배유진 배진경 배주임 배현영 배혜옥 백미란
 백미순 범서운 변상미 변은숙 변은주 복금희 부경미 서금자 서미경 서숙경 서순덕 서애리 서영옥 서은정
 서은화 서춘이 서향수 서훈숙 선춘자 성미화 성영애 성유정 소희주 손경희 손미희 손선영 손성희 손소희
 손영미 손영희 손외순 손유영 손은희 손진영 손춘영 손춘자 손해연 손혜선 손혜진 송경아 송경진 송금식
 송미연 송미옥 송민숙 송숙희 송영미 송은순 송은주 송인숙 송영심 송향숙 송혜영 신남영 신민경 신선
 신선미 신성남 신미숙 신수정 신숙경 신옥희 신윤아 신윤정 신은미 신은숙 신은정 신춘자 신희정 신희정
 심경희 심문희 심미숙 심상란 심지현 아영아 안건순 안김정애 안규빈 안규심 안연순 안영숙 안지영 안진
 경 안진영 안진희 양경화 양명숙 양미화 양승화 양영아 양영임 양옥희 양이현경 양유리 양은미 양현진
 양현희 엄경희 엄미영 엄은지 여명순 여혜숙 연정숙 연정희 오교회 오미영 오미화 오민희 오성희 오세자
 오송희 오순이 오승임 오승희 오영숙 오예원 오윤희 오은미 오은하 오현미 오현주 오희남 왕임순 우미숙
 우상규 우세희 우영주 원정하 유금선 유미숙 유삼례 유상희 유선옥 유수정 유신희 유영미 유영선 유윤례
 유진옥 유춘자 윤경미 윤경선 윤경신 윤금순 윤미영 윤미향 윤서영 윤소영 윤수경 윤순녀 윤순애 윤애경
 윤영미 윤영연 윤은미 윤정원 윤정인 윤정자 윤주남 윤진영 윤진영 윤혜진 윤희숙 이강숙 이강실 이경순
 이경옥 이경용 이경자 이경진 이경희 이귀례 이근미 이근하 이경선 이금란 이기연 이기원 이김현숙 이나
 미 이나선 이나영 이덕경 이동숙 이동화 이로미 이매실 이명선 이명자 이명희 이문희 이미경 이미두 이
 미리 이미선 이미숙 이미애 이미영 이미진 이미현 이미화 이민경 이민숙 이복자 이상숙 이상순 이새라
 이석임 이선미 이선옥 이선우 이선자 이선화 이소정 이소현 이수정 이숙련 이숙향 이숙희 이순례 이순례
 2 이순임 이순호 이승은 이아란 이애란 이연록 이연희 이영선 이영숙 이영심 이영은 이영혜 이영희 이에

Women's Declaration for Sustainable Peace and Prosperity on the Korean Peninsula

The new year 2019 has come. The year 2018 was "a historic turn on the Korean Peninsula" as jointly declared at the 4.27 Panmunjom Declaration, in other words, a year of peace has come. The two leaders declared a substantial end of the Korean War, saying "there will be no more war on the Korean Peninsula." 'The Panmunjom Declaration', the U.S.-North Korea Summit and 'the September Pyongyang Joint Declaration' gave hope and expectation for the future of peaceful prosperity and 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for the women of two Koreas who have endeavored to overcome division and build peace. The newly launched peace in the Korean Peninsula in 2018 should have its substantial results in 2019. Women pursuing for sustainabl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declare as follows.

1. **The peace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should be completed through sustainable peace and unification through democratic participation that reflects women's voices and concerns.** In the divided Korea, women had to cope with great pain and sacrifice. We believe that sustainable peace will be achieved when women participate in the peace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This is also stated in 'th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325 on Women, Peace and Security' adopted unanimously by the United Nations on October 31, 2000, and copes with 'the Women Participation Plan in the Field of Peace and Unification under the 2nd Republic of Korea Action Plan for th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325.'
2. **The quality of life of two-Korean women should be improved through regularization of inter-Korean women exchanges and cooperation.** In the Panmunjom Declaration, the two leaders pledged to "revitalize multifaceted cooperation, exchanges, and contacts with each other in order to heighten the atmosphere of national reconciliation and unity". Inter-Korean women have to interact and contact in various ways to promote women's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The inter-Korean governments should actively support and support inter-Korean women in order to substantially improve the life quality of women through exchanges and cooperation.
3.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which hinder the development of inter-Korean relations of peace and prosperity, should be quickly lifted.** The United Nations and international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are hampering the improvement and development of inter-Korean relations that are aimed at the development of a balanced national economy. If the coope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for peace and prosperity on the Korean peninsula is not smoothly pursued by the sanctions of the United Nations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 sustainabl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will be delayed. Moreover, it is inevitable to have a negative impact on the improvement of the life quality of the

inter-Korean people. Therefore,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which impede the development of inter-Korean relations and bring about a humanitarian crisis, must be lifted quickly.

Women are hoping for the second U.S.-North Korea Summit, which is expected to be held at the end of February, to make substantial progress toward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a peace regime. We hope that the peace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will be consolidated upon Kim Jong Un, the Chairman of the State Affairs Commission of the DPRK visit to South Korea as promised in the September Pyongyang Joint Declaration. On February 12th and 13th, 2019, at the North-South Joint New Year's Day event held on Mt. Kumgang, inter-Korean women will try to find common agendas for women's exchanges and to practice them in order to make the future of peace in this land. Women in the North and South will actively participate in the peace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become the subject of history leading to peace, prosperity and unification of this land.

January 28, 2019 Women's organizations and individuals (in alphabetical order)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국제사회에 보내는
한국 시민사회단체 호소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흔들림 없이 이어져야 합니다

지난 2월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구체적인 합의 없이 종료되었습니다. 이번 회담에 대한 한반도 주민들의 기대가 높았던 만큼 아쉬움이 매우 컸습니다. 양국은 대화와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나, 지난 금요일(3/15) 북한이 협상 중단도 고려한다고 발표하는 등 북미 간의 교착 상태가 길어질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의 54개 시민사회단체는 상황을 악화시키는 그 어떤 조치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흔들림 없이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한반도 평화와 직결된 북미 협상 재개를 촉구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들과 국제사회도 지지하고 협력하기를 호소합니다.

1) 북미 대화는 반드시 재개되어야 합니다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은 지구상 마지막 냉전 지대인 한반도의 갈등 해소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70년 가까이 서로를 적으로 삼아온 두 국가가 상대방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협상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전면적인 비핵화를 일거에 수용하라는 것이 현실적이지도, 적절하지도 않은 이유입니다. 북한 역시 비핵화 의지 표명에도 불구하고 뿌리 깊은 불신이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우리는 싱가포르에서 북미가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 한반도 평화체제와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한 것을 상기하며, 상호 간의 요구와 기대 수준을 맞추어 최소한의 단계적, 동시적 이행에 나서기를 기대합니다. 그 과정에서 신뢰가 쌓이면 더욱 큰 도약도 가능할 것입니다. 북한과 미국은 서로의 의견에 진지하게 귀 기울여 반드시 다음 대화를 이어가야 합니다.

2) 최소한 인도적 부문에 대한 대북 제재는 해제되어야 합니다

유엔은 대북 제재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모든 결의안이 제재뿐만 아니라 평화적, 외교적, 정치적 조치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북한과 미국이 상호 주권을 존중하며 평화적으로 공존할 것을 촉구하고, 대화를 통한 '평화적, 포괄적 해결책'을 주문한 것이 결의안의 진짜 의미입니다. 무엇보다 인도적 지원은 그 무엇으로도 막아서는 안 되는 인류 보편의 가치이며, 유엔의 정신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이 강조하고 있듯이 대북 제재는 북한 주민의 삶을 악화시키거나 인도적 지원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유엔의 대북 제재와 제1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오히려 강화되어온 미국의 독자 제재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조차 많은 어려움에 봉착해있습니다. 우리는 유엔 1718 위원회가 인도적 지원에 대해 일괄적으로 제재를 면제할 것을 촉구합니다.

유엔과 미국의 대북 제재는 남북 공동선언의 이행과 남북 교류협력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유엔의 대북 제재와는 관련 없이 중단된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조차도 헐사리 재개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남과 북이 군사적 대결을 중단하고 서로 만나고 협력하는 것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촉진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남북 간의 인도적 문제 해결과 교류협력 발전을 어렵게 하는 대북 제재는 조속히 완화되어야 합니다.

3) '평화의 과정으로서 비핵화'의 원칙을 견지해야 합니다

한반도의 핵 문제는 불안정한 정전체제의 일부입니다. 북한 핵 문제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지속된 한반도의 군사적 대결과 군비 경쟁 속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렇기에 한반도 비핵화는 한반도 평화체제로의 전환과 북미 관계 정상화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로지 '북한의 비핵화'만이 협상의 입구일 수는 없습니다. 한반도 평화는 비핵화만으로 구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는 한 과정으로서 비핵화를 실현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평화협정 체결, 불가침 조약, 북미 수교 등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은 함께 병행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한반도의 주민들이 간절히 바라는 완전한 비핵화는 한반도를 둘러싼 모든 핵 위협이 제거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만으로는 달성될 수 없습니다. 한국, 미국, 일본이 의존하고 있는 확장억제 전략의 폐기 역시 한반도 비핵화의 과제 중 하나입니다. 핵 없는 한반도는 동북아시아 비핵지대, 나아가 핵 없는 세계를 향한 디딤돌이 되어야 합니다.

4) 평화적인 방법으로 평화를 실현하는 것 외의 다른 선택지는 없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는 인류가 지구상에 산재한 수많은 문제들을 평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척도일 것입니다. 우리는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만들었고 또 확인해왔습니다. 작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 남북은 일체의 적대 행위를 중단했고, 한반도는 정전 이래 가장 평화로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군사적 긴장과 핵 전쟁의 위기가 반복되었던 과거로 되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이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비롯한 국제사회에 호소합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각고의 노력이 결실을 맺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이 절실합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굳건히 이어지도록 함께 해주십시오. 한국 시민사회 역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2019년 3월 1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고령사회를 이롭게 하는 대전여성, 광주여성민우회, 군포여성민우회, 녹색연합,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대전여민회,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대전평화여성회, 동아시아평화회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사)겨레하나, (사)세종여성, 사단법인 녹색교통운동, 사단법인 평화 3000, 사단법인 평화나눔회, 새로운 100년을 여는 통일의병, 생태지평 연구소, 서울남서여성민우회,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시민평화포럼, 실천여성회 판,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원불교 평양교구, 인천여성민우회,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제주평화인권센터, 전쟁없는세상,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참여연대, 춘천여성민우회, 통일나무, 통일맞이, 평택평화센터, 평화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평화통일연구소, 피스모모, 한국 YWCA 연합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 YMCA 전국연맹, 환경운동연합,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총 54개)

성명서

대북식량지원에 대한 여성들의 요구 : 인도주의적 지원은 골든 타임을 놓쳐서는 안된다. 지금 당장 대북식량지원을 추진하라!!

북한의 식량위기가 심각하다는 소식을 지난 5월 3일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 식량계획(WFP)이 발표한 '북한의 식량안보분과 보고서'를 통해 접한 지 벌써 보름이 지났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의 식량 생산이 2008년 이후 최저 수준이며, 북한 주민의 43%에 해당하는 1,090만 명이 식량 부족에 시달리고, 생후 6개월에서 23개월까지 어린이 중 3분의 1이 하루 최소량의 식사만 공급받고, 그 결과 어린이 5명 중 1명은 만성적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발육 부진이 우려된다.

통일부는 지난 5월 14일 대북지원단체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통일부장관이 북한 주민에 대한 동포애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식량지원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다만 대북 식량지원에는 국민적 공감과 지지가 필요한 만큼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추진할 계획"이라는 점을 설명했다고 한다.

여성들은 대북식량지원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지지하며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1. 대북식량지원의 골든 타임을 놓치지 말고 꼭 필요한 시기에 지원해야 한다.

5월부터 9월까지 식량 사정이 악화되는 춘궁기가 시작되었다. 이미 시간이 부족하다. 여러 가지 절차로 당장 결정을 해도 최소 2개월이 걸린다는 것이 통일부의 설명이다. 통일부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중앙정부 차원의 식량 지원 결정을 빨리 내려 시행하고, 또 지자체와 대북지원단체들이 효과적으로 신속하게 북한에 식량을 전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2. 대북식량지원의 정례화를 통해 북한의 만성적 식량 위기 극복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북한의 식량위기는 만성적인 것이며, 올해에도 가뭄으로 인해 식량 생산이 더 낮아질 가능성이 예상된다. 따라서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대북 인도적 지원단체가 거버넌스를 통해 식량지원의 정례화, 제도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퍼주기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차관 방식 혹은 물물교환 방식을 통해 상호 윈윈하고 신뢰조성을 통해 한반도 생명공동체 수립을 위한 구체적 발걸음이 시작되어야 한다.

3. 대북 인도적 지원 문제는 한국 정부의 자율적 결정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

인도주의는 적과 우리를 구별하지 않는다. 북한 주민의 43%가 식량 부족에 시달리며 어린이의 1/3이 최소 식량을 공급받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식량지원 문제를 한미워킹그룹에서 논의하는 것이야말로 매우 비인도적인 처사이다. “인도주의와 정치를 분리해야 한다.”고 데이비드 비즐리 유엔 세계식량계획(WFP) 사무총장이 5월 13일 김연철 통일부 장관을 만나 밝혔듯이, 북한식량지원과 같은 인도적 지원 문제를 한국 정부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의제로 전환해야 한다.

2019년 5월 16일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회, 부산여성단체연합, 성매매문제 해결을위한전국연대, 수원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울산여성회, 전국여성연대, 정의당 여성위원회, 제주여성민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익전화, 한국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 한국한부모연합, 함께하는주부모임, 한국YWCA연합회

South Korean Women Demand Immediate Food Aid to North Korea Statement by South Korean Women's Organizations

It has been over fifteen days since the UN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FAO) and the World Food Program (WFP) warned of a food crisis in North Korea in its May 3 report.

According to the report, North Korea's food production fell to its lowest since 2008, with food shortages affecting 10.9 million people, or 43% of North Koreans. Only one third of children between the ages of 6 months and 23 months receive the minimum amount of meals daily. One in five children suffers from chronic malnutrition and is at risk of underdevelopment.

On May 14, the South Korean Ministry of Unification declared that it would address the issue of food aid to the North Korean people “on the basis of brotherly and humanitarian principles.” Yet it added that the food aid plan would be “implemented in full conformity with national opinions” and therefore hinged on “national sympathy and support for aid to North Korea.”

1. As women, we fully support food aid to North Korea and demand the following:

Do not delay food aid to North Korea. The period from May to September is a critical farming window. Time is running out. The Ministry of Unification warned that even an immediate decision on food aid would take at least two months to implement procedurally. We urge the Ministry to press the central government for a swift decision on food aid, and to help local governments and

civil organizations to deliver food to North Korea effectively and quickly.

2. **Prepare a plan for regular aid to help overcome North Korea's recurrent food crises.** North Korea suffers recurrent food crises and it is expected that food production will further fall this year due to drought. Therefore, the centr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s, and humanitarian aid organizations should plan for regular and institutionalized food aid. Also, there should be concrete steps to establish a life community on the Korean Peninsula based on mutual benefit and on confidence-building.
3. **The South Korean government should decide on humanitarian assistance to North Korea in a sovereign manner. There should be no distinction between friend-or-enemy.** With 43% of North Koreans suffering from food shortages and one-third of children only receiving the minimal amount of food for survival, it would be inhumane to subject food aid to political conditions set by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related to the denuclearization process. "We must separate humanitarianism and politics," said David Beasley,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World Food Program (WFP), on May 13, when he met with the Minister of Unification Kim Yeon-chul. The South Korean government should make its own sovereign decisions to send humanitarian aid to North Korea free from politics.

May 16, 2019

Kyunggi Women's Association United, Kyungnam Women's Association United, Daegu Kyungbuk Women's Association United, Daegu Women's Association, Busan Women's Association United, National Solidarity against Sexual Exploitation of Women, Suwon Women's Association, Korea Women's Center for Social Research, Ulsan Women's Association, Korea Women's Alliance, Justice Party Women Committee, Jeju Association for Women's Rights, Women Making Peace, Pohang Women's Association, Korean Women Workers Association, Korean Women's Association United, Korean Womenlink, Korea Women's Hot Line, Korean Hanbumo Association, House Wives Meeting Together, National YWCA of Korea, Korean Women's Movement for Peace

한반도 전쟁종식과 평화를 위한 여성행동 Korea Peace Now Campaign 발족 기념 공동성명

한반도의 전쟁을 종식시키고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한 여성들이 행동이 오늘부터 공식 활동을 전개하게 되었다. 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는 국제여성평화운동 단체인 Women Cross DMZ, Nobel Women Initiative, WILPF와 함께 지난 2015년 30명의 국제여성평화운동가들이 남북의 군사분계선을 걸어서 통과한 여성평화걷기 활동의 성과를 이어받아 한반도에서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평화운동을 전개시키기 위해 출범하였다.

여성들이 전쟁종식과 평화를 위한 행동으로 모인 이유는 무엇인가?

한국전쟁은 종식되지 않은 채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 체결 이후 66년 동안 분단 체제로서 아직도 한반도에서 지속되고 있다. 66년의 분단에서 남북한 주민들이 전쟁의 공포로부터 자유로웠던 적은 한 번도 없으며, 북의 핵개발과 미국이 핵우산이라는 가공할 위협 속에서 한반도의 주민들은 살아왔다. 분단은 그 자체로서 폭력인 바, 한국전쟁은 당장 종식되어야 한다. 여성들은 전쟁과 분단체제에서 성폭력, 젠더폭력의 피해자로서 살아왔고, 북 여성들 또한 유엔과 국제사회의 제재의 결과로 고통과 희생을 치루며 살아가고 있다.

한반도의 분단은 동북아의 비평화의 요인이며 군비증강의 명분을 제공해 왔다.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의 군사비 지출은 미국(1위)-중국(2위)-러시아(3위)-일본(8위)로 막강하며 한국 역시 세계 10위의 군비지출을 하고 있다(2018년 기준). 군비증강은 곧 군사적 긴장을 의미하며, 따라서 동아시아의 군비 경쟁, 군사적 경쟁 구도를 평화의 구조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한반도 전쟁이 종식되는 것 이외의 확실한 대안은 없다.

이에 한국의 여성운동, 남북여성교류, 대북인도적 지원, 국제여성평화연대 활동을 주도해 온 4개의 단체들은 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를 결성하여 국제여성평화운동과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한반도 전쟁 종식과 평화를 위한 활동을 시작하면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한국정부에 대한 요구 - 한국정부는 한반도의 남쪽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명과 평화를 보장해야 할 국가적 책임을 다 해야 한다. 한국정부는 북과 미국, 북과 세계를 소통시키는 화해의 촉진자 역할과 보다 적극적인 평화체제 형성의 당사자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유엔에 대한 요구 - 유엔은 한국전쟁에 다국적군의 참전을 결정한 주체로서 판문점에 이름뿐인 유엔사를 유지함으로써 한국전쟁과 분단의 지속에 관여하고 있다. 이제 국제평화를 위해 창설된 유엔은 한반도의 주민들의 생명과 평화를 위해 유엔 본연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유엔사무총장과 안보리회원국은 한반도 종전에 대한 안보리 결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미국에 대한 요구 - 한국전쟁 참전국 16개국 중 북과 수교하지 않고 협력적 대화를 하지 않는 유일한 나라로서, 1950년 발발하여 66년째 휴전 상태를 지속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전쟁을 이제는 종식시켜야 할 책임이 있다. 미국은 북에 대한 안전 보장을 약속하고 신뢰를 형성할 수 있는 비핵화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 미국은 북과의 전쟁을 중단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로 나서야 한다.

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는 한국전쟁이 종식되고 이 땅에 진정한 평화, 여성들의 평화를 앞당기기 위해 한반도 평화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한다. 여성들의 단지 숫적인 참여를 넘어서 지속가능한 한반도의 평화의 미래를 만들어 가는 데 기여할 여성참여의 모델을 발굴하고 한반도에 적용가능한 참여의 실천을 통해 여성들의 생명과 평화를 지키고, 전체 한반도 주민들의 평화로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는 데 기여할 것이다.

2019년 5월 24일

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

(한국여성단체연합,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YWCA연합회, 전국여성연대)



Women Mobilizing
to End the War
KOREA PEACE NOW

Five Reasons We Need Peace in Korea

한국에 평화가 필요한 5가지 이유

한국전쟁은 미국에서 가장 긴 전쟁 중의 하나이다. 더 이상 실질적인 전투가 벌어지지 않는다고 있지만 전쟁 당사자 간의 적대 행위가 계속되어 한반도의 극단적인 군사화를 초래하고 있다.

우리가 한반도 평화 협정이 필요한 5가지 이유가 여기에 있다.

1. **평화협정은 오래된 고비용의 미국 군사 분쟁의 가능성을 없애거나 크게 줄일 것이다.**
 - 깨지기 쉬운 휴전은 미국과 북한의 관계는 70년 동안 휴전 상태로 되어있었고 이것은 전쟁이 언제든지 발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게 될 경우, 초기 며칠 만에 30만 명이 죽을 것으로 추정된다. 제임스 매티스 전 국방부 장관은 북한과의 전쟁은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애에 있어 가장 최악의 전쟁이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 1953년 한-미간의 상호 방위 조약에 있는 조항과 1961년 중국-북한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 때문에 합법적으로 북한과의 전쟁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 직접적인 무력 충돌을 일으켜 더 큰 지역 전쟁을 발생시킬 수 있다.
2. **평화 협정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중대한 진전이 될 것이다.**
 - 북한의 핵 능력을 달성하려는 주된 동력은 미국에 의한 엄청난 핵 위협이었으며 미국이 평양에 대한 “적대 정책”을 그만두지 않을 때까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 평화는 비핵화를 위한 필수 조건이다. 누군가를 설득하여 총을 내려놓으려면 당신은 그들이 해를 입지 않을 것이라고 먼저 설득해야만 한다.
 - 한반도 비핵화의 유일한 방법은 한국전쟁을 종식하는 것과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 그리고 관계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3. 평화협정은 수백만 북한 국민들의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전략은 여러 차례의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의 경제 제재, 일방적인 미국 제재, 다른 국가들과 북한과의 외교 관계를 단절시키기 위한 미 국무부의 공격적인 전략을 초래했다.
 - 현재의 제재들은 유엔 기관과 북한에서 가장 취약한 인구 집단을 위한 인도적 지원 단체들에 의해 제공된 인도주의적인 생명선을 근본적으로 차단했다. 6만 명이 넘는 북한 어린이들이 강력한 제재로 인한 인도주의적인 공급 때문에 사실상 기아의 전조인 심각한 급성 영양실조 위험에 처해있다.
 - 유엔 세계 식량 계획(WFP)의 의장인 데이비드 비슬리에 따르면, 북한과의 평화 협정의 유용성은 북한의 식량 안보 문제를 크게 개선할 것이라고 한다.
4. 한반도 평화 협정에 대한 강력한 지지가 있다.
- 한국 내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중 9명의 한국인들은 한반도 전쟁의 종식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평화 협정은 영원한 전쟁의 미국 정책을 끝내고 국가 자원을 군대로부터 더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로 전환되는 중요한 단계가 될 것이다.
- 미국과 북한 간의 평화 협정은 미국의 대외 정책과 7천억 달러에 달하는 군사 예산을 조정할 기회를 제공할 것이며 이는 진정한 인간 및 생태적 안전을 향상시키는 국내 투자로 이어질 수 있다.



Women Mobilizing
to End the War
KOREA PEACE NOW

Korea Peace Now Factsheet #2

A History of Relation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미국과 북한의 관계 역사

1953년 휴전 협정이 일시적으로 한국 전쟁을 중단시켰다. 모든 국가 당사자들은 3개월 이내에 공식적인 평화 협정을 협상하기로 되어 있었지만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로부터 북한과 미국의 관계는 언제든지 전쟁이 발발할지 모른다는 불신과 두려움으로 특징 지워졌다. 수년간 미국과 북한 관계를 살펴보면 왜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편협한 관점이 적대 행위를 해결하지 못했는지를 알 수 있고 실제로 그들을 확대했다.

1980년대-1990년대 초반

- 1985년 12월 북한은 비핵화 국가들이 핵무기 개발과 보유를 포기할 것을 요구한 핵무기 비확산 조약(NPT)에 가입했다.
- 1991년 냉전 종식 후 H.W. 부시 대통령은 미국의 전술 핵무기 대부분을 한국에서 철수시킬 것을 승인했다. (미국은 1958년에 한국에서 핵 법령 및 미사일을 비축하기 시작했고 이 과정은 30년 이상 지속되었다.)
- 미국과 한국은 연례 “Team Spirit” 공동 군사 훈련의 취소를 발표했다.
- 부시 행정부는 북한의 초기 핵 야망에 우려를 표하면서 북한과 외교적 대화 수단을 개방하기 시작했다.

북미 핵동결 협약(1994-2003)

- 미국은 북한에 대한 즉각적인 배치를 위해 중장거리 핵무기를 계속 유지했다. 그 결과, 평양의 핵 야망은 주로 안보 욕구와 냉전 종식 때의 소련의 연료 보조금 손실로 인한 에너지 부족에 의해 묶여 버렸다.
- 1994년 10월 21일, 미국과 북한은 안전보장과 에너지 보장에 대한 대가로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동결시키고 해체할 것과 양국의 정상화된 정치 및 경제 관계를 요청한 북미 핵동결 협약에 서명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2003년까지 에너지 발전을 위한 2개의 경수로를 북한에 제공하고 그동안 50만 톤의 중유를 공급하기로 약속했다.
- 북미 핵동결 협약은 북한의 핵 계획을 둘러싼 당면한 위기감을 완화시켰지만 북미관계는 긴장된 채로 남아있었다. 워싱턴은 협상이 끝날 때까지 합의하지 않았다. 조약의 이점에 회의적이었던 미 의회는 약속된 중유 공급에 자금을

투자하는 것을 꺼려했고 외교 및 경제적 관계의 정상화의 진전이 거의 없었다.

- 2003년에 북미 핵동결 협약은 결국 파기되었고 북한은 이후에 가동 가능한 우라늄 강화 시설을 개발하기 시작했다.

페리 프로세스(1999-2000)

-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우려, 미신고 가능성이 있는 핵 활성도의 의혹, 북미 핵동결 협약의 불균등한 이행 가운데, 클린턴 정부는 윌리엄 페리 전 국방 장관을 임명하여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정책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했다. 페리 장관은 한국의 김대중 대통령의 많은 도움을 받아 두 나라를 화해의 길로 되돌려 놓았다.
- 클린턴 정부의 마지막 달에는 고위급 외교의 폭증과 2000년 6월 첫 번째 남북 정상회담 이후 수반된 남북관계의 진전을 확인했다.

부시 대통령과 “악의 축” (2001-2003)

- 2001년 취임 후, 조지 워싱턴 부시 대통령은 이란과 이라크와 함께 악명 높은 ‘악의 축’에 북한을 끌어들이고 북한에 대한 새롭게 강력한 제재를 가하면서 평양에 더 강경한 정책을 취했다.
- 정부 기밀의 핵 태세 검토보고서가 누설된 이후 양국 관계가 더욱 악화되어 적대행위 시 잠재적 핵 목표물로 확인된 7개국 중 하나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일 위원장은 이 계기를 이전 미국의 안보 보장에 대한 노골적인 위반 행위로 대대적으로 규탄하면서 북한의 관심방어적인 핵기능 확보에 관한 평양의 새로워진 관심을 표명했다.
- 2003년 북미 핵동결 협약이 파기되면서, 평양은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적대 정책”을 그만두지 않는 한 “핵 제지 능력”을 구축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하기 시작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위원장은 북한의 핵 보유권을 확인하고 강화 프로그램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 협상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 그러나 부시 정부는 어떤 종류의 협상을 위한 선결 조건으로 북한 핵 계획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해체”(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 CVID)를 계속해서 촉구했다. 두 나라는 다시 한 번 의견상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교착 상태에 빠졌다.

북핵 6자 회담(2003-2009)

- 2005년 중국, 일본, 북한, 러시아, 한국, 미국 간의 다자간 협상에서 북한이 핵무기와 관련된 R&D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핵무기 비확산조약(NPT)에 복귀하겠다고 서약하며 엄청난 돌파구를 이루었다.

- 2007년까지 모든 당사국은 북한에 관한 미국의 명백한 비침략 선언을 포함한 합의 이행을 위한 일련의 협약에 합의했다.
- 평양은 2008년 영변 원자로 탐의 많은 공표된 파괴를 포함하여 합의에 대한 협약을 단언하기 위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했지만, 결국 검증에 대한 의견 충돌에 따라 2009년에 협상이 파기되었다.

전략적 인내와 실패한 도약의 날 협상(2009-2017)

-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하기 전, 북한과 적극적으로 관계를 맺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아시아 국가 안보 회의의 아시아 담당 수석 이사인 제프리 베이더는 미정부가 미국과 북한 외교에서 ‘도발, 강요, 보상’의 패턴을 깨기 위해 ‘전략적 인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 결과적으로, 오바마 정부는 분쟁이 발생했을 때 평양과 교제하는 것을 꺼려했고 제재를 강화하고 체제를 고립시키는 것을 선호했다.
- 그러나 이면에서 스티븐 보스워스 대사는 식량 지원의 대가로 북한의 핵무기 개발 계획을 동결시키는 협상을 시작했다.
- 그러나 정권 붕괴 이론을 자극한 2011년 김정일의 건강 악화와 궁극적인 죽음은 오바마 시대의 외교 가능성을 좁혔다. 김정일 위원장의 후계자 김정은이 2012년 2월 29일에 발표된 소위 ‘도약의 날’협상에 계속 전념했지만 북한은 평화적인 목적으로 위성을 발사했다. 미국은 위성 발사를 협정 위반으로 간주하여 사실상 계약을 파기했다.

트럼프 정부의 최대 압박 정책

- 트럼프 정부는 출범 첫해 ‘전략적 인내’를 실패한 정책이라고 말하며 이를 대체하기 위해서 제재를 조금씩 늘리고 북한의 고립을 늘릴 ‘최대 압박’전략을 발표했다.
- 2017년 8월 북한이 핵탄두 장착 기술을 개발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정보 보고서에 따라, 트럼프는 북한이 미국에 대한 위협을 계속한다면, “세계가 본적이 없는 불과 격분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유엔 총회 연설에서, 트럼프는 “미국이 자국이나 동맹국들을 방어하도록 강요된다면 우리는 북한을 완전히 파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두 달 뒤 북한은 화성-15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에 성공했다.

싱가폴 정상회담(2018)

- 2018년 1월, 김정은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완전’선언하고 남한에서 열리는 2018 동계올림픽 참가의 제안을 수용했다. 트럼프는 예정된 한미 군사훈련을 올림픽 이후로 연기하는 것에 동의했다.

- 북한의 올림픽 참가는 4월 27일 김정일 국방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과의 만남을 포함한 일련의 남북대화를 이끌었고 이 만남을 통해 한반도의 전쟁 위험 제거라는 공동 목표를 구체화했다.
- 지난 3월 평양에서 열린 남한 당국자들과의 고위급 회담에서 김정은은 트럼프와의 만남에 대한 관심을 전했다. 트럼프는 이 제안을 받아들였다. 북한은 그 의도에 대한 입증으로 미국 억류자 3명을 석방하고 회담을 앞두고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몇 개의 터널을 파괴했다.
-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트럼프-김정은 정상회담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북한의 약속과 함께 관계 개선과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창출을 다짐하는 공동성명을 도출하는 등 북-미 정상의 첫 만남이었다.
- 정상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트럼프는 곧 있을 대규모 한미 연합 군사훈련 중단에 합의했다고 선언하고 김 위원장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장 해체를 약속했음을 시사했다. 트럼프는 또한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한국전쟁 종전선언과 그 서명을 위해 신속하게 움직이자고 합의했고, 그 뒤에 북핵문제가 ‘크게 해결됐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싱가포르 사후 정상회담(2018-)

- 정상회담이 끝난 후 북한은 미사일 시험 발사 지점 철거에 착수했고 미군 유해 55상자를 반환했다.
- 그러나 미국과 북한은 비핵화 순서와 의미를 놓고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교착상태에 빠져있다.
-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 할 때까지 제재가 온전하게 유지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북한은 종전 선언과 미국의 제재 일부 완화 또는 면제를 시작으로 정치 경제 관계 정상화 또는 적대 관계 종식 및 화해 등을 주장했다.
- 그러나 북한은 미국의 상호 호혜적 행동 부재를 비판하면서도 ‘대응 조치’를 대가로 영변 핵시설을 해체하겠다고 제의했고, 트럼프를 개인적으로 칭찬하기도 했다. 그의 일반 교서에서 트럼프는 2019년 2월 베트남에서 두 번째 정상 회담을 개최했다.
- 한반도 종전선언과 비핵화 협상이 임박해 보였지만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은 아무런 합의 없이 끝이 났음. 트럼프 대통령은 영변 핵시설 폐기에 대한 상응조치로 전면적인 제재 해제를 요구하였다고 밝혔으나, 북한 외무상 이용호는 북한은 영변 핵시설 폐기에 따른 조치로 민생과 관련한 몇몇 제재 해제만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은 지속적인 대화를 하겠다고 밝힘



Women Mobilizing
to End the War

KOREA PEACE NOW

Korea Peace Now Factsheet #3

The Humanitarian Impact of Sanctions on North Korea

북한에 대한 제재의 인도적 영향

북한이 2006년 1차 핵실험을 한 이후, 미국의 일방적 제재에 더하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거의 12개에 달하는 제재를 가하고 있다. 제재 주창자들은 이들을 군사행동에 대한 평화적 대안으로 볼 수도 있지만, 제재는 북한 주민에게 상당한 인도주의적 피해를 주고 있다. 1,300만 명의 취약계층에 생명줄을 제공하는 비정부기구, 인도주의 기관, 원조단체 활동을 제한하고 있다는 증거들이 있다. 1949년 제네바 협정에 대한 직접적인 위반으로, 이러한 제재들은 북한 주민들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제재가 일반 북한 주민에게 어떤 해를 끼치는지는 다음과 같다.

제재는 긴급히 필요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저해하고 장기적으로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 2018년 유니세프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미 20만 명의 북한 어린이들이 심각한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고, 제재가 강화되면서 야기된 인도주의적 공급의 중단으로 인해 이러한 취약 어린이 6만 명을 기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 일방적인 미국의 제재는 북한주민에게 필수적인 인도주의적 수송품들을 지연시키거나 철저히 차단한다. 한 비정부기구(NGO)는 최근 북한에 콩 16상자를 수송하는데 1년 반이 넘게 걸렸다고 보도했다.
- 2017년 통과된 제재는 어떠한 금속제품의 운송도 금지하여 필수약품의 운송을 완전히 방해하고 있다. 재생산 건강 키트의 출하에는 키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알루미늄 증기 멸균기가 포함되어있어 상당한 지연이 있었다.

제재는 북한의 민간 경제를 겨냥하고 가장 취약한 주민들에게 해를 끼친다.

- 현재의 제재들은 의도된 대상인 권력층들이 아니라 노동 계층을 포함한 가장 취약한 북한 주민들, 특히 난방과 요리를 위한 의료용품, 음식, 연료에 대한 접근이 제한된 외딴 지역에 사는 어린이와 노인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 또한 수출과 해외 근로자 파견에 대한 금지는 일반 시민들의 생계지원 능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섬유 수출에 대한 금지는 노동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여성 고용에 불균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 5만 명이 넘는 북한주민을 고용하는 합작 공장 폐쇄 결정과 더불어 어업, 의류 및 석탄 산업에 대한 제재는 날로 증가하는 시장경제에서 많은 사람들의 소득을 빼앗을 것이다.

결론

더 많은 제재와 군사적 압박, 고립으로 한국전쟁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대화와 협상을 통해 신뢰를 쌓으면서 해결되는 것이다. 이미 심각한 북한의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미국의 관계 정상화에 대한 진지한 의지를 보여주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인도주의적 문제는 북핵 협상 문제와 분리되어야 하며, 최소한 인도적 지원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에게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어떠한 제재도 수정해야한다.

Korea Peace Now Factsheet #4



Women Mobilizing
to End the War

KOREA PEACE NOW

Why Women Need to Be a Central Part of Creating Peace in Korea

왜 여성이 한국의 평화를 만드는 일에 중심이 되어야 하는가?

여성은 한반도 평화를 요구하는 사회운동의 선두에 있어 왔다. 1951년 한국전쟁 당시 17개 국가의 21명의 여성이 전쟁의 참상을 기록하고 즉각적인 종식을 요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도 위협할 수 있는 피폐해진 한국을 방문했다. 1989년, 남한 대학생 대표인 임수경은 현재 진행 중인 한국의 분단 상황에 도전하고 통일을 지향하는 일을 하기 위해 남한과 북한을 나눈 한국의 비무장 지대를 가로지른 첫 번째 민간인이었다. 1990년대에는 도쿄, 평양, 서울에서 열린 일련의 회의를 통해 남북한과 일본인 여성들이 전쟁 이후로 처음으로 만났다. 남북한이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협력을 추구했던 햇볕정책 10년(1998-2008)년 동안 수백 명의 남한 여성들이 DMZ를 건너가 북한 여성들과 만나고 대화했다. 2015년 냉전시대 분단 70주년을 맞아 노벨 평화상 수상자 2명과 페미니스트의 선구자 글로리아 스타이넘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온 30 명의 여성들이 DMZ를 넘어 평화협정과 함께 한국전쟁의 종식을 외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한국 평화 프로세스에 참여하는 여성은 거의 없다.

2000년 6월 15일 남북 정상회담의 남북 평화 과정에서 24명의 대표 중 단 한 명만이 여성이었고, 2018년 9월 19일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51명의 대표 중 여성은 한 명도 없었다. 한국의 평화 과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성이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라이베리아에서 북아일랜드까지, 여성들은 평화협정을 맺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연구는 여성단체를 포함한 시민 사회 단체의 평화프로세스의 참여는 평화협정이 성공할 가능성이 36% 가 더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여성들이 평화 프로세스에 참여할 때, 최종 합의가 적어도 15년 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35%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성의 표상만으로는 불충분하다. 40개의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주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여성 단체들이 협상 과정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때 최종적으로 평화협정에 도달할 가능성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평등한 참여와 평화 과정에 대한 의미 있는 관여를 포함하는 것도 2000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325호와 여성이 분쟁 예방, 관리, 해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인정한 2017년 미국에서 결정한 여성, 평화 안보법 또한 모두의 책무이다. 2018년 12월 현재, 미국, 한국을 포함한 79개국이 여성, 평화, 안보에 관한 안보리 1325의 이행을 위한 국가 행동 계획을 채택했다.

또한, 스웨덴, 캐나다 등을 포함한 몇몇 국가들은 여성과 소녀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발전시키며 평화, 안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외교정책에서 이들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페미니스트 외교정책을 채택했다.

이러한 노력들은 무기를 비축하거나 위협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협상과 협력을 통해서 억압과 부정의 구조를 해체함으로써 진정한 인간 안보를 규정하는 평화 안보에 대한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 방식인 페미니스트적 평화를 강화하려는 세계여성평화운동의 일환이다. 전쟁이 인간 안보를 저해하는 불안의 궁극적인 형태라는 것을 인지하면서 페미니스트 평화 지지자들은 분쟁에 대한 장기적인 해결책을 고취하고 모든 사람들을 보호하는 평화와 안보 의제를 지지한다.

소개



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

전국여성연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YWCA연합회



Women Mobilizing
to End the War
KOREA PEACE NOW

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

Korean Women's Movement for Peace

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는 성평등한 한반도, 전쟁 없는 세상을 위해 풀뿌리 여성들의 목소리를 모으고, 여성과 젊은 여성들의 역량을 강화하며, 평화활동가, 전문가, 모든 파트너들의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새롭게 설립된 한국의 연대체입니다.

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는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 활동해 온 한국여성단체연합,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YWCA연합회, 전국여성연대에 의해 창립되었습니다.

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는 2020년까지 한반도 종전을 위한 교육과 조직, 평화과정에서의 여성참여 등의 주창활동을 전개하는 “Korea Peace Now! Women Mobilizing End the War” 글로벌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본 캠페인은 평화와자유를위한여성국제연맹(Women's International League for Peace and Freedom, WILPF), 위민크로스디엠지(Women Cross DMZ), 노벨워민스이니셔티브(Nobel Women's Initiative)와 함께 비핵화, 평화과정에서의 여성참여, 제재해제, 인도적지원에 대한 주창활동을 전개합니다. 특히, 여성연대를 통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의제개발,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한 동북아 여성평화활동가들과의 연대, UN과 UN회원국, 미국 의회에서의 한반도 여성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공공외교 활동 등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를 향한 걸음을 걸어 나가고자 합니다.

1. 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 활동 목표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프로세스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의제를 개발하고 정책을 제안합니다.

- 여성 연대를 통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서 군축, 비무장화, 인도주의, 화해, 치유, 복지, 내적통합과 상생 등이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공공거버넌스 모델을 통한 의제를 개발합니다.

평화활동가 리더십 향상과 역량강화를 이루어 갑니다.

- 여성 역량을 강화하여 UN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화해를 이루는 평화구축자로서의 역할을 다합니다.
- 미국과 한국의 풀뿌리 단체, 청년 평화활동가와의 연대를 통해 세대를 넘어 국경

을 넘어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를 만들어 갑니다.

경계를 넘어 평화를 이루어 갑니다.

- 국가주의를 넘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협력 체제를 위해 ‘동북아여성평화회의’를 재구축합니다.
- 국제여성평화운동 단체와의 공동 연대의 힘으로 한반도의 전쟁종식을 이루어 갑니다.

성평등한 한반도를 이루어 갑니다.

- 평화와 안보, 지속가능한 발전, 인권 증진을 위해 여성들의 참여를 촉진하는 UNSCR1325의 이행과 실천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 분쟁과 일상의 삶의 경계를 잇는 상호공존의 가치를 가지고 비핵화 평화체제를 위한 여성 참여 모델을 개발하고 시민평화외교활동을 실천합니다.

평화문화를 만들어 갑니다.

- 분단과 전쟁으로 고통 받고 있는 우리의 이웃에 대한 공감과 인권감수성으로 인도주의와 평화문화를 이루어 갑니다.
- 일상의 군사화, 군사화 된 폭력구조, 성차별주의가 여성과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남북한 여성의 화해와 협력을 실천합니다.

2. 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 활동 내용

연대를 통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의제개발

- 평화과정에서의 여성참여 모델 및 평화협정 의제개발
- 2020년 총선 평화안보 정책의제 개발 및 국회의원 후보 모니터링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한 동북아 여성평화활동가 연대 확대

- 동북아시아 여성, 평화, 안보를 위한 라운드테이블 공동주최

UN, UN회원국, 미 의회에서의 지속적인 시민공공외교활동

- 미 의회 방문, 시민사회-국회의 협력적 시민공공외교 활동 전개
- UN 및 국가 대상의 주창활동 전개
- 한반도의 평화적 조치,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하는 온라인/오프라인 캠페인 활동

평화과정에서의 적극적, 실재적 여성참여를 위한 리더십 개발

- Young Peace Builder와의 연대 및 국내외 활동

- 여성평화운동 전문가, 시민사회, 국회의 지속적 연대 및 협력

4. 함께하는 국제평화단체

여성평화걷기(Women Cross DMZ)

여성평화걷기는 한반도 전쟁 종식, 이산가족 재결합, 평화건설에서의 여성 리더십 보장을 위한 여성 운동입니다. 전세계 여성 평화활동가 연합체인 여성평화걷기는 2015년 5월 북한과 남한 사이의 비무장 지대 (DMZ)를 종단하는 상징적인 1만명 여성평화걷기를 진행하였습니다.

노벨 여성 이니셔티브 (Nobel Women's Initiative)

노벨 여성 이니셔티브는 노벨 평화상 수상자 6명의 사회적 영향력을 이용해 전 세계에서 평화, 정의 및 평등을 위해 세계 각지에서 활동하는 여성의 힘과 가시성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여섯 명의 여성들의 특별한 경험을 토대로 전 세계의 풀뿌리 여성 단체와 여성 운동가들의 활동을 주목하고 증폭하고 홍보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평화와자유를위한여성국제연맹(Women's International League for Peace and Freedom, WILPF)

1915년 설립된 평화와자유를위한여성국제연맹은 비폭력적 수단을 통한 평화를 추구하고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정의를 증진하는 전 세계 모든 여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군국주의에 도전하고 평화에 투자하며 다자주의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Korean Women's Movement for Peace)

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는 성평등한 한반도, 전쟁 없는 세상을 위해 풀뿌리 여성들의 목소리를 모으고, 여성과 젊은 여성들의 역량을 강화하며, 평화활동가, 전문가, 모든 파트너들의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새롭게 설립된 한국의 연대체입니다. 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는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 활동해 온 한국여성단체연합,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YWCA연합회, 전국여성연대에 의해 창립되어 국제연대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5. 함께하는 국내 평화단체

한국여성단체연합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YWCA연합회
 전국여성연대

전국여성연대는

2007년 7월 8일에 출범한 여성단체 연대조직으로 여성해방과 민족자주평화통일, 6.15공동선언실현과 반전평화실현, 신자유주의 착취구조 반대를 위해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 여성과 사회적 약자를 위해

전국여성연대는 여성을 주변화하는 모든 요소에 저항합니다. 여성, 청소년, 아동에 대한 성폭력/성착취 구조를 근본적으로 없애기 위해 활동합니다.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 위해 활동합니다.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위해 활동합니다.

* 신자유주의 경제질서에 반대

여성에 대한 고용시장에서의 차별에 반대합니다.
여성노동자의 차별해소를 위해 활동합니다.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해 활동합니다.

* 반전평화 자주통일을 위해

남북여성교류사업, 여성평화기행, 여성통일한마당 등 통일을 향한 다양한 활동을 합니다.
주한미군에 의한 성폭력, 성착취 근절 활동을 합니다.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부산여성회, 울산여성회, 광주여성회, 구로여성회, 천안여성회, 서귀포여성회, 제주여성회, 당진어울림여성회, 경기자주여성연대 (성남여성회, 평택여성회, (경기)광주여성회, 화성여성회, 용인여성회, 수원일하는여성회, 안양나눔여성회, 분당여성회, 안성여성회, 남양주여성회, 이천여성회, 안성여성회, 하남여성회) **경남여성연대** (남해여성회, 진주여성회, 사천여성회, 양산여성회, 진해여성회, 함안여성회, 창원여성회,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부)

평화를만드는여성회(Women Making Peace)

평화를만드는여성회는 1997년 3월 28일 창립되었습니다. 평화여성회 창립 멤버들은 1991~3년 동경-서울-평양-동경에서 열린 남-북-일본 여성들의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 한국실행위원회 멤버들이었습니다. 1994년 이후 북핵 위기로 토론회가 지속되지 못하고, 1995년 이후 북한의 홍수피해로 식량난이 심각해지던 시기에, 전문적 여성평화·통일운동단체의 설립의 필요성에 공감하여, 북한여성과 아동지원 캠페인을 시작하면서 평화를만드는여성회가 창립되었습니다.

지난 22년 동안 평화를만드는여성회는 남북여성교류, 북한여성과 어린이 지원, 평화군축운동, 양심적 병역거부 운동, 군사주의 반대운동, 평화문화(평화감수성)운동, 갈

등해결과 평화교육,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연대활동, 유엔안보리결의 1325호 국가행동계획 수립 촉구활동과 국가행동계획 수립(2014년) 이후 민간자문단 활동, DMZ 여성평화걷기 활동, 여성평화연구 등 다양한 영역에서 한국여성평화운동의 역사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제 평화를만드는여성회는 한반도 평화과정의 의미 있는 참여 모델을 발굴함으로써 성평등한 한반도를 만들어 가기 위해 정책제안, 대중적 캠페인, 국제연대활동, 여성평화전문가 역량강화, 젠더와 평화교육 등의 차원에서 노력할 것입니다.

■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55길 6 여성미래센터 4층

■ 전화:02-929-4846/4847, 팩스: 02-929-4843

■ 홈페이지: www.peacewomen.or.kr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이하 여성연합)은 지속가능한 성평등 사회를 만들고 여성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전국 7개 지부 28개 회원단체와 함께 활동하는 여성단체들의 연합체입니다.

1987년 창립한 이래 정치, 사회, 문화, 경제, 환경 등 모든 영역에서의 젠더 불평등에 대항하며 성평등한 사회구조로의 변혁을 위해 활동해왔습니다. 2018년 '내 삶을 바꾸는 성평등 민주주의-For Gender Justice', 2019년 '성평등이 민주주의의 완성이다'를 기조로, 사회 규범과 가치, 제도와 정책 등 각 분야에서 성평등에 기반한 실질적 변화를 이뤄내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성평등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최근에는 미투운동, 낙태죄 폐지 등 젠더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과 여성의 몸에 대한 통제에 맞서왔고 정치, 경제, 사회의 각 분야에서의 여성의 대표성 확대를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한반도의 성평등한 평화와 통일을 위해 1991년 남북 최초의 민간교류인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를 시작으로 남북여성민간교류 활동을 지속해왔으며, 지역 통일 교육, 남북여성토론회·남북여성통일대회 개최, 대북 인도적 지원, 동북아시아 및 세계 각지의 여성평화운동가와 함께하는 여성평화회의와 등 여성주의적 평화통일운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 홈페이지: <http://women21.or.kr>, 전자우편 : kwau@women21.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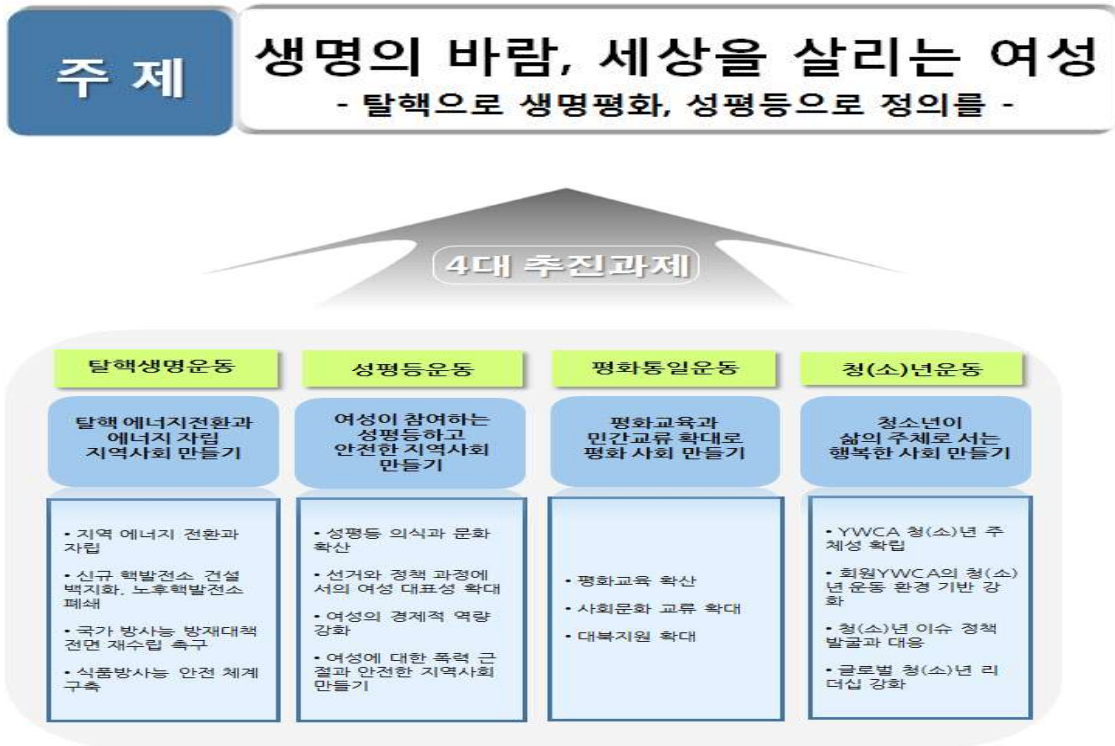
■유선전화 : (82) 2-313-1632, 팩스 : (82) 2-313-1649

한국YWCA연합회

◆ 활동 내용

한국YWCA(Young Women's Christian Association)는 1922년 창립되었으며, 국내 52개 지역에서 국내 9만 여 명의 회원들이 섬김, 나눔, 살림의 가치를 실천하고 있는 기독교여성단체로서, 120개 회원국으로 조직된 세계YWCA에 속해있는 국제단체이다. 주요 활동으로는 호주제 폐지, 여성폭력예방, 저소득층 여성의 직업 지지 활동 등의 여성의 인권 강화 운동, 아나바다 활동을 필두로 한 환경운동, 소비자 권리 운동, 사회복지 사업, 건강한 사회를 위한 다양한 시민운동 등을 전개해왔다. 여성의 직업훈련과 능력개발, 돌봄노동의 사회화 운동, 여성 지도력 모델 발굴과 시상,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복지시설 운영, 어린이와 청소년 대상 경제금융교육, 결혼이민여성과 탈북민을 위한 사회적응과 직종 개발, 북한어린이돕기 모금을 비롯한 평화통일운동, 탈핵생명운동 등 다양한 운동을 펼치고 있다.

◆ 2018~2019 한국YWCA 정책



◆ 한국YWCA 평화·통일운동

1980년대 평화와 통일을 위한 전국 정오기도회를 시작으로 북한YWCA재건 기금 마련을 시작하였다. 1993년 평화의 인간띠 잇기, 1994년 한민족여성대회, 그리고 1996년에는 '어머니의 마음을 북한 어린이에게'라는 주제로 분유보내기를 시작하였다. 이어 내복,쌀국수,감귤 등으로 진행되었으며, 이후 북한바로알기, 탈북민정착지원, 어린이 유아교재 개발 등으로 확장되었다. 2011년 '내 식비의 10분의 1을 북한어린이에게'로 전국 차원의 모금을 진행하여 분유지원을 재개하였다. 2013년 남북여성이 함께 하는 '길위의 평화학교'가 시작되어 2017년부터는 'YWCA여성순례:한라에서 백두까지'를 창립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